

#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5호 | 2023 여름

포커스 **한일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포커스 제5호 (2023 여름)

---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 5 Summer 2023)

## 동북아역사포커스

제5호 2023 여름

발행일 2023년 6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이영호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위가야, 이동욱, 조건, 조윤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http://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편집자의 글</b> 김현철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4
<b>특별기고</b>	<b>한일의 역사인식 문제로 인한 갈등, 해법은 있는가</b>	7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b>한일 관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전망</b>	22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시즈오카현립대학 객원교수/전 일본 외무성 대사	
<b>포커스</b> <b>한일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b>	<b>한일 관계와 안보: 전략적 안보협력은 가능한가</b>	36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b>한일 경제협력과 경쟁: 현황과 전망</b>	48
	박성빈 아주대학교 교수 / 일본정책연구센터장	
	<b>&lt;사랑의 불시착&gt;에 나타난 일본과 한국의 북한 인식</b>	57
하승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b>‘반일’과 ‘혐한’을 넘어</b>	65
이지원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b>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에너지협력 가능성의 모색</b>	76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b>연구동향</b>	<b>한일협정 관련 자료집 발간에 대하여</b>	89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 소장	
<b>현지통신</b>	<b>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요구한 10년간의 법정투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의 허구</b>	105
	이양수 일한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차장	
	<b>워싱턴의 벚꽃과 저패뉴어리(January), 그리고 한일 관계</b>	119
	강병철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 불리워지는 한국과 일본 관계의 변화 추세를 지켜볼 때,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뿐만 아니라 교류와 협력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5호에서는 ‘한일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역사 문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양국 간 갈등과 현안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기고」에서는 한일 관계의 변천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과 그동안 정부 차원의 접근과정을 양국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일강제병합, 한일협정 체결과정, 일본군‘위안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등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선 양국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한국 측과 일본 측의 견해를 보여주는 글들을 「특별기고」에 실었습니다.

먼저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일의 공동 자산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양국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측 입장을 보여주는 글로서 도쿄 가즈히코(東郷和彦) 시즈오카현립대학 객원교수이자 전 일본 외무성 대사는 현재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도 좀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변천을 바라보는 시각과 역사관에서 양국 전문가의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스」에서는 외교·안보, 경제, 북한 문제, 사회·문화, 에너지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이 한일 양국이 현재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유사시 한일 간 전략적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산업 분야로서 박성빈 아주대학교 교수가 그동안 한일 간 경제 격차가 줄어들고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과 산업이 협력, 경쟁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추세를 설명하고, 앞으로 양국이 무역, 투자, 금융, 디지털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문화 분야로서, 하승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TV 드라마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 배경과 반응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호 인식과 관련하여 이지원 한림대학교 교수는 ‘반일’과 ‘혐한’으로 불리는, 상대국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 및 증오의 마음을 표출해 온 역사가 한일 관계 회복의 난관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에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 분야로서, 임은정 공주대학교 교수는 한일 양국이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와 자원 부족의 어려움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동향」으로 조운수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장은 한일협정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된 양국의 외교문서 등 방대한 자료를 분류 정리하여 재단에서 발간한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 등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통신」에서는 일본과 미국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일한회담 문서/전문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차장이 그동안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요구해 온 일본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그 성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병철 연합뉴스 특파원이 워싱턴에 핀 벚꽃을 매개로 1월이 ‘일본의 달’이라고 상징될 정도로 일본과 유대가 깊은 미국 내에서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이 독자들께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의 변화와 현재 각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학생과 시민 등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김현철

# 한일의 역사인식 문제로 인한 갈등, 해법은 있는가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1. 머리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023년 3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행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한일공동선언이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1998년 10월 8일 발표한 것으로, 당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사죄와

---

## 특별기고

반성을 표명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동선언 직후 일본 국회 연설에서 “나는 이 선언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98년 한일공동선언 이후 한일의 역사갈등은 다방면으로 확산되었고 외교뿐 아니라 경제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글에서는 식민 지배는 부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왜 여전히 역사인식 문제가 한일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한일 관계의 토대, 식민 지배는 부당했다는 역사인식

### (1) 한일국교정상화와 식민 지배 인식

한국이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되고 나서 6년이 지난 1951년 10월 20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됐다. 그러나 35년간의 식민 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로 인해 회담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식민 지배가 합법이고 한국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53년 10월 15일 재산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으로서도 조선에 철도와 항만을 만들고, 농지를 만들고, 당시 대장성이 많은 해에

## 특별기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식민 지배가 합법이고 한국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는 2,000만 엔이나 내놓았다. 이것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여 한국 측의 청구권과 상쇄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영태 외무장관은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그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한 침략 근성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1957년 12월 일본 정부가 구보타의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한일 간 교섭은 중단됐다.

교섭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1965년 1월 7일에도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일본 수석대표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산에 나무 한 그루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이 일본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sup>1</sup>라고 발언한 것에 드러나듯이 15년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역사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국교정상화를 단행했다. 1965년 1월 17일 한일협정 조인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이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발언했다. 2월 20일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외상은 공동성명에서 “그와 같은 과거 관계에 대해

1 『赤旗』, 1965. 1. 21.



한일협정 조인식(1965. 6. 22)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외상. e역사영상관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6

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바라고 말하였다”라고 했다.

이원덕이 지적했듯이<sup>2</sup> 시이나 외상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대일 감정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고 기본조약을 조인하기 위해 막후에서 노력한 결과였지, 일본 정부의 역사적 성찰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식민 지배는 부당했다는 인식을 토대로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이나 외상이 일본으로 돌아간

<sup>2</sup> 이원덕, 2005, 『한일회담에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 『韓國史研究』 131, 125쪽.

직후인 2월 2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 다음 발언을 보면, 그의 발언이 식민지 지배는 부당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 말씀드리자면 한 민족이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타 민족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당한 민족의 민족감정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또는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든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8월 26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를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한공동성명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인식을, 중국에 대해서는 일중공동성명에서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는 인식을 밝혔는데, 이것도 앞서 기술한 우리 나라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으로서 현재도 이러한 인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1965년 한일공동성명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부당했다는 역사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시이나 외상의  
발언은 식민 지배는  
부당했다는 인식을  
토대로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 일본 각료의 망언과 사임·파면

1982년 교과서 문제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이웃 나라에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동으로 식민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각료의 발언이 증가했다.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파면된 각료는 1명, 사임한 각료는 4명이다.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상의 파면 사례를 보면, 그는 1986년 『문예춘추(文藝春秋)』 10월호에 “한국병합은 한국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에 대해 나카소네 총리는, 정치가 개인의 발언이지만 일부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린 여러 나라 국민들의 감정에 상처를 입혔으며, 정부의 외교정책에 쓸데없는 의혹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후지오 문부상을 파면했다.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관방장관은 후지오 문부상의 파면 이유로 ‘일본이 여러 기회에 표명해 온 이전의 전쟁에 대한 반성과 그 위에서 평화를 결의한 것을 부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도 ‘각료의 자질이 의심되는 후지오 발언’이라는 사설(9월 7일)을 통해 피해국을 배려하지 않은 후지오 문부상의 발언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병합조약 결과 한국이 식민 통치로 고통을 받은 것이 대일 감정의 ‘원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후지오 발언은 “우리들이 전후 중요하게 여겨 온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근린 제국과의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멋대로의 폭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외교 감각이 없는 정치가는 나

라를 망친다’(9월 7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후지오 문상의 파면은 당연하다’(9월 9일), 『산케이신문(産經新聞)』 ‘후지오 문상 파면을 지지한다’(9월 9일)와 같이 일본 주요 언론도 사설을 통해 후지오 문부상의 발언을 비판하고 파면 결정을 지지했다.

### (3) 일본 정부 역사인식의 총결산, 무라야마담화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치 지도자의 역사인식이 한일 및 중일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역사인식을 표명하게 된다.

1984년 9월 7일 나카소네 총리는 전두환 대통령 방일 환영 오찬 연설에서 “유감이지만 금세기 일 시기, 우리 나라가 귀국 및 귀국 국민에게 다대한 고난을 끼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성을 표명했다.

1990년 5월 25일 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따른 정상회담에서는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가 “과거 한 시기 한반도 분들이 우리 나라의 행위로 인해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호소가와 모리히로 총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가져온 것에 대해 새로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밝힌다”라고 발언했다.

1992년 1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는 가이후 총리의 발언을 답습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죄를 표명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용어를 명기하고 사죄와 반성을 처음 표명한 것은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였다. 그는 1993년 8월 23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과거 우리 나라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가져온 것에 대해 새로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밝힌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1993년 11월 6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나라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반도 분들이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성명을 일본식으로 개명당하거나 종군위안부, 징용 등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 것을 가해자로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진사(陳謝)드린다”라고 구체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했다.

1995년 8월 15일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담화를 발표했다. 즉 무라야마담화는 무라야마 총리 개인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일본 정부 역사인식을 ‘총결산’한 것이었다.

1995년 8월 15일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담화의 문구를 보면 그 이전에 표명되었던 총리 발언 등을 답습

## 특별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담화가 1965년 이후 축적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라야마담화는 당시 각료 모두의 동의 하에 발표되었는데, 자민당 소속의 관료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통상산업상을 비롯해 전부 8명이었다. 즉 무라야마담화는 무라야마 총리 개인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일본 정부 역사인식을 ‘총결산’한 것이었다. 다만, 무라야마담화는 전쟁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는 청구권협정 등 양국 간 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무라야마담화 발표 이후 취임한 총리들은 무라야마담화 문구를 인용하거나 담화를 계승한다고 표명해 왔다.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 2002년 9월 북일공동선언도 무라야마담화 문구를 그대로 답습했다. 역사 수정주의자라고 비판받았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역시 공식적으로는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 (4) 한일의 공동자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간 총리 담화

무라야마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었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동선언 발표 직후 일본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 선언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

## 특별기고



일본 국회(중의원·참의원)에서 연설하는 김대중 대통령(1998. 10. 8)

e역사영상관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15

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사설(10월 9일)을 통해 “양 정상 의 역사인식에 관한 발언이 정부 간 공식문서에 처음 명기된 것은 과거 역사 문제에 중 지부를 찍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국민감 정을 고려하면 과거 역사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며, “공동선언이 단 지 제목으로 끝나지 않도록 양국 국민이 과거 역사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간 나오토 총리  
담화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3·1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식민지  
피해를 열거했다.

무라야마담화는 사죄 대상을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선언은 ‘한국 국민’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공동선언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최근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등 이 선언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듯이, 당시 선언은 한 일이 만든 공동의 평화자산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8월 10일 발표된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3·1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식민지 피해를 열거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다. 일본 총리가 담화를 통해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다. 간 총리 담화는 무라야마담화나 1998년 한일공동선언보다 진전된 것이었음에도 일본 민주당 정권이 단명함에 따라 그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 3. 왜, 아직도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반성을 말 하는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그럼에도 한국 국민은 왜, 아직도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첫째,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일회성 발언이나 담화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라고 했다. 즉, 반성과 사죄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지켜 나갈 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86년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가 중국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에게 보낸 편지는 역사인식 문제를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드러나 있다. 1985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해 중국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나카소네 총리는 참배를 하지 않

첫째,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일회성 발언이나 담화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성과 사죄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지켜 나갈 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특별기고

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후 40년이 지났다고는 하나 불행한 역사의 상처는 아직도 아시아 근린 여러 국민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 매우 어려운 곤란한 결단에 직면하더라도 자국의 국민감정과 더불어 세계 여러 국민의 국민감정에 대해 깊이 고려하는 것이 평화우호·호혜평등·상호신뢰·장기안정의 국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치가의 현명한 행동의 기본원칙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2012년 자민당이 다시 집권한 이후 일본 정부는 자국의 국민만을 염두에 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라는 문구를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꺼렸다. 그리고 2013년 8월 15일 개최된 정부 주최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1994년 무라야마 총리 때부터 언급했던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반성을 표명합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후 총리들의 추도사도 마찬가지다. 2015년 8월 14일 발표된 아베 총리 담화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식민 지배한 것을 ‘당시 국제사회의 대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그간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둘째, 1998년 한일공동선언 발표 후 『요미우리신문』이 지적했듯이 양국 국민이 과거 역사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 무라야마담화 발표 후 적어도 총리나 각료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인한 피해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언은 사라

졌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한일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역사공동연구를 추진했으나, 이러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 후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역사인식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시다 총리가 새로 사죄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으로 한일 간 역사인식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 4. 맺음말: 뾰족한 해법보다 지속적인 노력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언제든지 역사인식 문제로 인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25년의 세월이 보여줬다. 그렇다면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은 있는 것일까? 그런 도깨비방망이 같은 해법은 없다. 역사인식 문제는 총리가 일회성 발언을 하거나 양국 정상에 공동선언 등의 형식을 빌

둘째, 1998년 한일공동선언 발표 후 양국 국민이 과거 역사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

---

## 특별기고

그 토대가 되는 것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한일 공동선언, 2010년 간 총리 담화 등을 통해 양국이 공유한 식민 지배는 부당하다는 역사인식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약속이다.

려 합의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 그 토대가 되는 것은 1995년 무라야마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2010년 간 총리 담화 등을 통해 양국이 공유한 식민 지배는 부당하다는 역사인식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약속이다. 한일 정부는 그동안 양국이 축적한 이러한 평화자산을 토대로 역사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남상구(南相九, Nam, Sang-gu)**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일본 지바대학에서 일본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 간 역사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강제동원과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한일 관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전망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시즈오카현립대학 객원교수 / 전 일본 외무성 대사

지금 한일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외교관으로 34년을 지냈고, 퇴직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계속 공부해 온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판단이자 직감이다. 한일 관계에는 지금까지 ‘고비’라고도 할 수 있는 큰 전환기가 두 번 있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전환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 1. 제1전환기(1965)

한일 관계에는  
지금까지  
‘고비’라고도 할 수  
있는 큰 전환기가  
두 번 있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전환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제1전환기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합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한일 관계 정상화까지 실로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것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 관계였는지를 말해준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 당시 한국 측의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은 “병합(1910년 병합조약)은

불법·부당하므로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용서하기 어렵다는 한국 측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당시 일본의 지배가 조약에 따른 통치였으므로 유효”하다는 원칙을 양보하지 않았다. 196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910년 병합 조약 이전의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문구로 타협했다.<sup>1</sup> 또한 “무상 3억 달러+유상 2억 달러+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에 더하여 민간유상협력 3억 달러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치경제학자 노 다니엘은 “전후 한일 협력의 마스코트적인 존재가 된 것이 포항종합제철(현재 POSCO)이다”라고 평가했다. 포항제철 설립자 박태준은 1964년 봄 일본 방문 시 우연히 양명학자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의 눈에 들어 야하타제철[八幡製鐵: 현재 일본제철(日本製鐵)]의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嘉寛) 사장을 알게 되었다. 포항제철은 일본 재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일기본조약의 산물인 ‘무상 3억+유상 2억’ 중 24%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달러의 수혜자가 되었다. 노 다니엘은 “요컨대 포항종합제철소는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실현된 ‘한국 산업 근대화의 1번지’이며 이에 협력한 일본

<sup>1</sup> 편집자 주: 이와 관련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

## 특별기고

세계에서도 기념비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납치(1973), 문세광에 의한 육영수 여사 ‘암살’(1974), 교과서 문제(1982~1983)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일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2. 제2전환기(1998)

이 시기 세계정세를 크게 흔든 대변동이 일어난다.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yev)의 등장으로 소련이 격변하며, 1989년 미소 정상회담이 개최한 몰타회담에 의해 냉전이 종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분열되었다. 이를 계승한 러시아연방은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이 통솔하게 되었다. 냉전 기간 동안에는 미소 핵 균형에 의해 세계평화가 담보되어 왔지만, 냉전 후인 1990년대는 세계 각국이 지도 없는 항해를 하기 위해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한일 관계도 바로 그러한 움직임 중 하나가 되었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먼저 크게 부상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장관 담화(고노담화, 1993)를 통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며” 사죄를 표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으로 실현되었지만, 한국 시민운동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 방안을 ‘법적 책임 회피’라고 반발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

리의 담화(1995)다. 이 담화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 대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여기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한일 관계의 정점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다. 이 성명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평가하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자”라고 응하였고, 나아가 양국은 “젊은 세대가 역사인식을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하였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지  
문제에서 가해자인  
일본 측이 먼저  
사과하고, 한국 측이  
미래 지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아주  
훌륭한 성명이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지 문제에서 가해자인 일본 측이 먼저 사과하고, 한국 측이 미래 지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매우 의미있는 성명이었다. 그로부터 약 5년간 일본에서는 드디어 한국과 화해에 기인한 교제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작은 기대감이 생겼다. 그 상징이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2004년에 크게 히트하며 한류의 시작을 알린 <겨울연가>의 방영이었다.

그러나 경제력과 정치력이 갖추어진 한국은 드디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을 떨쳐낼 기회가 왔다고 느낀 것 같다. 2004년 일본이 <겨울연가>에 취해 있을 때, 한국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졌다. 2005년에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위해서 민관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사할린 잔류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1945년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법적으로 끝냈지만, 1965년 협상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도의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국인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강제동원<sup>2</sup> 문제는 1965년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이른바 ‘협정 내 문제’였다. 따라서 ‘진상규명법’은 일본 정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법 폭탄’과 같았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한국에서는 ‘1965년 체제의 형해화’ 논의가 단숨에 부상하였고, 일본에서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라는 격렬한 논의가 부상

2 편집자 주: 필자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제동원’으로 표현했다.

하면서 이 갈등의 기간이 18년이나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 3. 갈등의 18년(2005~2021)

물론 지난 18년간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진지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꺾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 “골대를 움직이는 한국”이라는 불신이 증대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도 “합병의 정당화를 주장하면서 반성에서 멀어지며 우경화되는 일본”의 이미지가 강해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우선 2015년 12월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일본은 정대협이 비판해 온 “국고 지출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에 국고 10억 엔을 지출하였다. 또 고노담화의 인식을 전제로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부는 책임을 통감”이라고 언급하며 총리의 사죄 마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화해는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2018년 정대협은 ‘정의 기억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해 1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체시켰다.

나아가 일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직접 일본 정부를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에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판결하였고, 4월에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여 무죄를 판결해 사법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 8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담화가 있다. 이 담화

## 특별기고

는 상당 부분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독자적인 색깔도 드러나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과 무관한 자식과 손자에게 사죄를 계속해야 하는 숙명을 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 일본인은 세대를 뛰어넘어 과거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acker) 독일 전 대통령의 “죄가 있든 없든 과거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와 공통점을 가진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지만, 한국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일본을 가장 곤란하게 한 것은 강제동원 문제였다. 2012년 대법원 1부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된 청구는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2004년 ‘진상규명법’ 이후 일본으로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11월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에 대해 2012년과 똑같은 논리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은 대다수 일본인을 깊이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이 취해진다면 일본은 당연히 이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양국 간 긴장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다음과 같은 일로 인해 양국의 정치적 긴장감은 계속되었다.

- 20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縣)이 ‘다케시마(竹島, 한국명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에 격노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 전쟁’을 선언함.
-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를 방문함.

- 2019년 G20 오사카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그 직후에 일본이 반도체·화학제품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한국이 격노하여 지소미아(GSOMIA) 폐기를 발표함.<sup>3</sup>

#### 4. 제3전환기: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2022. 5)

2022년 2월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포스트 냉전시대의 평화 구도가 일변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종전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또한 기존 초강대국 미국과 이를 추격하는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어 한일 양국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긴장도 격화일로를 걷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9월 방미 중이었던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현재 어려운 여러 문제의 돌파구로 강제동원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시작한다”라는 흐름이 처음 형성된 것 같다. 뒤이어 같은 해 11월 프놈펜(Phnom Penh)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이

<sup>3</sup> 2019년 말 한국 정부는 GSOMIA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 특별기고

루어졌고 한국 측의 정보로 “양국 실무진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이 1~2안으로 좁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만든 해법안의 윤곽이 2023년 1월 12일에 개최된 공개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1월 13일 자 보도에 따르면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원고)가 제3자를 통해서 판결금을 받는 것은 가능함.
- 원고 측에 직접 수령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예정임.
- 판결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함.
-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함.

요컨대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현금화 결정이 한일 관계를 더욱 크게 악화시킬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 정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신 지급’이라는 묘안을 짜낸 것이다. 다만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급’하였을 때 일본에 어떠한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는지가 논의의 쟁점이 되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에 새로운 개별 행동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이 나온 원고는 3건(일본제철 1건, 미쓰비시중공업 2건) 외에 현재 한국에서 계류 중인 기타 사안도 있다. 이에 대해서 2023년 1월 18일 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한국 대법원에서 9건, 하급심에서 60건이 계류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다음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의 전면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1월 17일 조현동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후속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104회 3·1절 연설이 있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에 비하면 매우 놀라운 연설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일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견해를 말한 부분이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복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sup>4</sup>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한 세기 전에 한국을 하나로 만든 힘의 현대적 발휘라고 하면서 일본과 협력의 의미를 간결하게 언급하였다.

3월 6일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안을 발표하였다. 합의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하겠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발

<sup>4</sup> 이 3·1절 기념사는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올려져 있다.

표한 것을 토대로 한 내용으로 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하였다.

## 5.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친애하는 한국의 독자 여러분, 필자는 인생의 전반을 일본 외무성에서 주로 소련·러시아 문제를 다루었고, 이후 주로 동북아 국제정치와 일본 외교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이 글의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외교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이다. 외교가 탁월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외무성 재임 시절 필자는 필생의 과업으로 일본과 소련·러시아의 영토 문제 해결에 힘써 왔다. 연구자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양국 간의 영토 교섭에 뜨거운 시선을 쏟았다. 결과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양국 모두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동안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은 일본 외교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다. 필자는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1965년, 1998년에 이어 세 번째 전환기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일 양국이 이 ‘기회의 창’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두 번째, 외교는 ‘합주(合奏)’여야 한다는 점이다. ‘합주’란 ‘함께 연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된 이상 일본 정부는 그 나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자국 재단의 ‘대신 지급’에 대해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성의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다’, 즉 상대국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열린 ‘기회의 창’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 제시 등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열렸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의 연구자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국민이 이에 응답해서 ‘함께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해주면 좋겠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된 이상 일본 정부는 그 나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자국 재단의 ‘대신 지급’에 대해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성의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거기서 나올 문제는 한국의 책임이니까 일본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주하는’ 파트너로서 일본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기개와 방침을 갖기 바란다.

세 번째, 외교에는 ‘전략’이 필수다. ‘전략’이란 눈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길고 깊은 시야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 속에서 현재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역사와 지리 혹은 시간과 공간이다.

---

## 특별기고

일본과 한국은 적어도 야마토(大和)시대부터 짧은 전쟁과 긴 평화의 역사적 관계를 키워 왔다.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일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이다. 오랜 역사를 공유한 이웃 나라로서 결코 이사할 수 없는 양국이 지금 찾아온 세 번째 전환기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필자는 일단 일본 정부와 국민의 저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 미력하지만, 필자도 세 번째 전환기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싶다.

번역: 김보라



###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Kazuhiko Togo)

시즈오카현립대학 글로벌지역센터 객원교수/전 일본 외무성 대사

1968년 도쿄대학(국제관계론) 졸업 후 외무성에서 소련과장, 조약국장, 구아국장을 거쳐, 세 번의 모스크바대사관 근무 후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하였다. 2002년 퇴임 이후 라이덴대학, 프린스턴대학, 서울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라이덴대학에서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0~2020년까지 교토산업대학 교수·세계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일본외교,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

포커스

# 한일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

---

**한일 관계와 안보:  
전략적 안보협력은 가능한가**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한일 경제협력과 경쟁: 현황과 전망**

박성빈 아주대학교 교수 / 일본정책연구센터장

---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일본과 한국의 북한 인식**

하승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반일’과 ‘혐한’을 넘어**

이지원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에너지협력 가능성의 모색**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한일 관계와 안보

## 전략적 안보협력은 가능한가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1. 한일 안보협력의 출발점

흔히 한일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일본 역사교과서 등 과거사(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주로 언급한다. 하지만 한반도 침략과 더불어 태평양전쟁의 주범이었던 일본 군국주의를 생각해본다면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적 의미에서의 안보협력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한반도 침략과  
더불어 태평양전쟁의  
주범이었던  
일본 군국주의를  
생각해본다면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적  
의미에서의 안보협력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다.

즉 미국이라는 공동의 동맹국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안보동맹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경험(일본 군국주의)에서 비롯된 한국 국민의 심리적 저항과 함께 전후 평화주의에서 비롯된 일본 국민의 ‘안보 알레르기’도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6·25전쟁에서 의도치 않게 간접적으로나마 ‘안보협력’을 경험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원산 등 여러 항구 주변에 북한군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위해 소해대(掃海隊)를 편성해 동원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각 항구에는 선적을 담당하는 일본인들이 동원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은 6·25전쟁을 지원하는 주일미군의 후방지원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금도 유엔군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미군 및 유엔군의 발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일본은 한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빅터 차(Victor D. Cha) 교수가 정의하듯이, 6·25전쟁 이후 냉전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공동으로 둔 유사동맹(Quasi Alliance) 형태로 제한적인 안보협력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한국 내 국민감정과 일본 평화헌법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군사적 형태의 직접적인 안보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냉전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 형태의 협력을 염두에 둔 시도를 했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웠고, 한일 안보협력 역시 일반적인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였다.

이 글에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2023년 현재까지 한일 안보협력을 살펴보고, 향후 한일 간 전략적 관점에서의 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일 안보협력의 전환점

1990년 이후 냉전 종식과 함께 한일 관계는 점차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일 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이 냉전시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사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한일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1998. 10. 8)  
대통령기록관 소장

(河野談話)와 무라야마담화(村山談話)를 발표하는 등 전향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는 존재하였다.

하지만 당시 북한 핵 개발 시도로 촉발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그동안 국민감정상 안보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표명하였다. 한일 정부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이전보다 솔직한 태도를 표명한 것을 평가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 지었고, 상호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일 간 협력 어젠다 중 하나로 ‘안보대화 및 국방교류 확대’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역사의 상흔을 넘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과거사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일 안보협력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략적 관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안보협력 분야를 포함시켰다. 한일 안보협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보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과 함께 ‘제도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일 군사 실무자 간 핫라인 설치와 정례 대화 실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대일감정과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제도적 제약 요인을 감안해서 안보협력을 다자주의, 비전통안보, 국제협력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한일 안보협력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서 먼저 주변국의 협력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 관계 발전과 함께 북한과 일본의 대화에 적극 찬성하였는데, 이는 결국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평

김대중 대통령은 전략적 관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안보협력 분야를 포함시켰다. 한일 안보협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보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과 함께 ‘제도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양 방문 및 ‘북일평양선언’ 발표로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포용적 대북정책을 수정해서 북한에 ‘엄격한 접근’을 표명하였고, 일본 정부 역시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양국은 대북정책과 연관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 실험 실시, 2010년 천안함피격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고, 일본 정부 역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국회에서 북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긴밀한 안보협조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한일 안보협력의 기운은 ‘제도화’ 형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게 만들었다. 즉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e Agreements)’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군사비밀정보 보호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GSOMIA 체결을 추진하였지만, 국내 비판여론에 직면하면서 2012년 6월 29일 협정 서명 당일에 갑자기 취소하였다. 이것은 여전히 한일 간 안보협력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 3. 한일 안보협력의 교착과 한계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를 중시하였고, 아베 총리 역시 취임 1년 후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

---

## 포커스

를 참배하면서 한일 양국은 이전 정부와 달리 취임 초부터 갈등관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일본은 박근혜 정부의 ‘중국경사론’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아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한국이 ‘역사’를 축으로 중국과 함께 대일 연대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 보수정권의 대통령, 즉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접근을 두고 자국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지원 아래 2015년 말 한국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이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는 보수이념화작업을 추진하면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추구하였다. 즉,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12월 책정한 ‘국가안정보장전략’에서 미일동맹 강화, 일본 독자적 군사력 강화, 우호국과 안보네트워크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안보전략 기조를 발표하였다. 특히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2015년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그해 9월에는 평화안보법제를 통과시켰다.

아베 정부는 평화안보법제 통과 이전인 2014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등장하였고, 자위대 활동이 일본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반면, 한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2016년 11월 한일 간 GSOMIA 체결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한일 안보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즉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대북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압력’, 즉 대북 제재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시기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John Bolton) 회고록에도 나타나듯이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2019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아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시를 환영하면서도 대북 공조를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북미 간 하노이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아베 정부가 2019년 7월 대한민국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시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한일 GSOMIA 연장 종료 선언으로 이에 맞서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 과거에는 한일 간 갈등이 단기간으로 정치 분야에 한정되었다면, 이때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등 한일 관계 전 영역에서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2018년 12월에는 한반도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비행 및 한국 광개토태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한일 간 상호 불신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상황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과  
맞물려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을 염두에  
둔 안보협력 논의에서  
한일 간 인식 차이를  
발생시켰다.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왔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군사 실무당국 차원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치 영역이 관여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한일 간 안보 영역에서 갈등이 증폭된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 간 '상호 불신'이 원인이었다. 아베 정부는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대화'와 '압력'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의심하였고, 문재인 정부가 반일과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보통국가' 흐름이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동맹 강화 추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였지만, 이것이 결국 '신냉전 구도'에서 한반도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 대외전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결국 한일 간 상호 불신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상황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과 맞물려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을 염두에 둔 안보협력 논의에서 한일 간 인식 차이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같이 오랫동안 지속된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고착화되면서 한일 간 전방위 영역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 4. 한일 간 전략적 안보협력 방안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던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는 아베 정부 때부터 유지하였던 기본 자세, 즉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으며, 한국 측이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면서 여러 차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23년 3월 ‘제3자 변제’ 방식을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결안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일본, 미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비록 완벽한 해결안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 중국의 군사력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인식을 같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서 향후 한일 간 전략적 안보협력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미들파워’ 외교 관점에서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공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2023. 2. 22)**

앞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이다. 합동참모본부 소장

동의 동맹국으로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힘의 균형 차원에서 중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 게다가 한일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서는 입장을 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이 중국에 대응하면서도 갈등상황을 ‘관리’하는 정책을 한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중이라는 두 강대국의 경쟁구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한일이 ‘미들파워’ 입장에서 상호 안보협력을 추구하면서 미중을 ‘견제’ 혹은 ‘관여’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둘째, 인도태평양전략 전개와 함께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한국 내에는 냉전형 대립구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존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협력하는 것과 달리 대중·대러 정책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조를 맞출 수 있는지 여

부가 아직 불확실하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문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2022년 12월 기사다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반격 능력' 개념이 들어가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지역에 북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게 되어 한반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군의 후방 기지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사전에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및 활동 제한을 논의하는 것과 함께 국방 당국 간 대화를 통한 제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대량 피난민 발생은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록 현재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원철수작전(NEO 작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한일 간에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하면서 안보협력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국제질서 변동과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밖으로의 안보협력'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한일이 전통안보 분야에서 미중

한국과 일본은  
국제질서 변동과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밖으로의  
안보협력'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 포커스

경쟁과 북한 및 대만 문제를 협력하기에는 한국 내 여론을 봤을 때 아직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면 한일은 비전통안보(신흥안보) 분야, 그 중에서도 그동안 일본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인간안보, 재해구조, 환경, 기후 변화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소다자 및 다자 협력의 틀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일의 역량을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닌 상호 협력하면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곧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헌하려고 했던 안보협력의 연장선이다.

현재 한국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만 대응을 집중했던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국력 신장과 함께 지역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반면 일본은 북한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중국, 러시아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문제는 별개가 아닌 동아시아 지역질서 안정에 직접 연관되는 현안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공동의 정세 인식 공유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위한 정책 구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 이기태(李奇泰, Lee, Ki-tae)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학연구과에서 법학박사학위(정치학 전공)를 받았다. 일본 외교안보정책, 한일 관계, 북일 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 게이오대학(2015~2016) 및 고베대학(2022~2023) 방문연구원, 『해양안보』 편집위원장, 현대일본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 한일 경제협력과 경쟁 현황과 전망

박성빈 아주대학교 교수 / 일본정책연구센터장

## 1. 서론

한일 간 경제관계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서 제공된 청구권 자금, 엔 차관 등 자금협력이나 기술 협력은 한국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과거 한일 간 경제협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지원 성격(이른바 ‘수직적 협력관계’)이 강했지만,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점차 미국, 중국, 아세안(ASEAN) 등 제3국 시장에서 한일 기업의 경쟁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즉, 점차 한일 간 비대칭적 경제협력은 그 역할을 다 했고, 한일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최근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한일 경제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한일 간 경제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지, 아니면 경제관계의 심화 혹은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

새로운 한일 경제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국 간 경제관계를 단순히 협력이나 경쟁의 이분법적 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한국과 일본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좋은 경쟁상대로서 시장의 확대를 주도하고, 중간재 무역 등을 통해 여전히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한일 경제관계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형성되지만, 정치·외교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주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한일 경제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협력이나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등 역내 경제협력 틀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한일 경제관계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 급부상과 이를 배경으로 하는 미중 통상 마찰, 우크라이나사태 등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와 양국 국내정치사회적 요인(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상호인식)으로부터 제약을 받는다.

## 2. 한일 경제관계의 전성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하여 한국은 무역, 투자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청구권 자금을 계기로 하여 한국으로 외화자금 유입이 확대되었고, 1960년대부터는 차관이 확대되었으며, 1973년경부터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급증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에서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하였고, 이를 가공하여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무역패턴이 정착되었다. 한국이 제조업 물품 수출을 증대하려면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등의 수입

확대가 필요했다. 즉, 한미일 3국 분업관계 속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상시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렸다. 한국 입장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이 일본의 중간재나 자본재에 의존하는 것은 수출 유발 효과가 크고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등 나름 합리적인 측면도 있었다.

1990년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엔 차관 공여가 종료되었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나 한일 교역 규모는 1990년대부터 축소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일 협력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다. 일본계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나 만기 연장 거부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당시 일본은 최악의 경제 상황(부실채권 문제의 심각화 등)이었고, 한국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개별적인 금융지원 요청을 거절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체제하에서 신미야자와 구상,<sup>1</sup> 한일 통화스와프<sup>2</sup>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다자 간 금융협력체제인 CMI(Chiang Mai Initiative)체제의 출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은 일본의 입장

1 1998년 일본(대장성)이 발표한 구상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한 동아시아 각국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금융 지원을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구상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 에너지 섹터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였다.

2 한일은 자국통화(원·엔)-달러 통화스와프 및 원·엔(자국통화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다. 한일 금융협력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금융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을 지지하는 등 역내 금융협력의 제도화를 주도했다. CMI체제하에서 일본은 한국과 원-엔(자국 통화 간) 통화스와프와는 별도로 자국통화(원·엔)-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존 130억 달러 규모였던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700억 달러로 확대했고 이는 한국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게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수출 주도 고속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고,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금융시장 불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한국이 중간재를 과도하게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 3. 한일 경제관계의 위기: 정치적·경제적 요인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은 역사 문제보다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우선했다. 종종 한일 간에 역사 문제 등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해도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경부터 한일 간에 정치적 갈등이 가중되면서 종종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2012년경부터  
한일 간에 정치적  
갈등이 가중되면서  
종종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한일 간에 체결된 통화스와프는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되었지만, 2013년에는 연장 없이 완전히 종료되었다. 당시 통화스와프 종료에 관해서 한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통화스와프가 종료되어도 외화 유동성 등 한국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한일 간에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중되면서 일본 정부는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list)에서 제외하였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간의 신뢰관계 손상과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간 신뢰관계의 손상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한국 무역관리체제의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한일 간에는 정경분리원칙하에 경제협력이 증시되어 왔지만, 2012년경부터는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이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한일 경제관계의 위기는 단순히 양국 간 정치적 갈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보면 양국 간 경제관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국제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점차 중간재 등을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중국은 2001년 일본을 제치고 2위 수출국이,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2000년경부터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감소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

2000년경부터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감소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3국 시장에서 조선, 자동차, 기계류, 전자부품,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일 산업 간 경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 김도형·아베 마코토 외 지음, 2015, 『한일관계사 1965-2015』 II(경제), 역사공간.

며, 제3국 시장에서 조선, 자동차, 기계류, 전자부품,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일 산업 간 경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4.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전망과 쟁점

과거 한일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지만,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가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협력모델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이 필요하다. 202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이므로, 기존 한일 경제관계를 회고하고 새로운 한일 경제관계를 모색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까? 동북아역사재단은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출판<sup>3</sup>에 대한 지원을 했다. 이 연구는 한일 경제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연구성과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2015년과 비교하여 오늘날 한일 경제관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국가 간 경제관계는 무역·투자 등의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일 경제관계와 더불어 미국 및 중국 등과의 경제관계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입장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경제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안보적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과거 국가 간 교역이나 투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경제안보적 관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외환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한일 통화스와프 등 금융협력은 2012년 한일 갈등의 영향으로 단절되어 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된다면 다시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한일 간 금융협력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중앙은행 차원의 통화스와프 등 금융협력과 더불어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예를 들면, 일본 메가뱅크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 금융시장 육성 협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제3국 시장에서 한일 기업·산업 간 경쟁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한일 산업 간 경쟁과 협력관계라는 양면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양국의 경제나 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일 산업 간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양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나 수소차 등 분야에서 한일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전통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경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SBDC)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핀테크(FinTech), 소프트뱅크(SoftBank)와 네이버(NAVER) 합작회사 설립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 탈탄소, 저성장, 디지털화 등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에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고, 디지털경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디지털경제, 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이나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국과 더불어 지정학적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구조에서 점차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고 한일 간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면서 양국 간 경제관계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한일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은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기와 비교해서 다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한일 경제관계는 일방

한일 경제관계는  
일방적 협력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경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 포커스

적 협력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경쟁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이 글은 한일 경제관계를 둘러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개론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일본 경제나 한일 경제 관련 연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 이는 한국 내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저하하고, 일본 연구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 경제의 위상이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여전히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일본 경제나 한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높다. 향후 일본 경제나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박성빈(朴盛彬, PAK, Seongbin)**

아주대학교 교수 /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박사를 받았다. 일본 경제·경제정책(특히, 금융, 통상 등) 및 정치경제, 한일·중일 경제관계(공급망, 자동차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국제학부장, 현대일본학회 편집위원장, 한일차세대학술연구포럼 운영위원(경제·경영 분과), 중앙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일본과 한국의 북한 인식

하승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1. 〈사랑의 불시착〉 그 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방영된 지 3년이 지났다. 드라마는 남한의 재벌 상속녀가 패러글라이딩 중에 북한으로 불시착하여 북한군 장교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으로 다소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21.7%의 최고 시청률을, 일본에서는 ‘은사마[ようん(勇)さま]’ 이후 4차 한류로 이어질 만큼 큰 인기를 누리며 다시 한 번 새로운 한류 역사를 썼다. 드라마의 인기가 시들해질 즈음 들려온 두 주인공의 결혼 소식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방송을 거듭하며 주목을 이어가게 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사회를 주요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북한 인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북한을 배경으로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1 이 글은 필자의 2022년 논문 「한류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타나는 일본 내 북한 인식의 변화: 일본인 전문가 서면인터뷰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쓴 글임을 밝힌다.

한 문제의식으로 필자는 일본과 한국의 정부기관, 방송,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인한 북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sup>1</sup>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북한을 배경으로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2019년 방영 당시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열풍은 편성의 제약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 가능하게 했으며,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와 이동 제한은 OTT 시청 증가로 이어지며 일본인들의 한류 콘텐츠 시청 방식 변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안보 문제와 직결된 북한 군대의 등장은 일본의 중장년 남성들을 한류 콘텐츠 시청자로 유입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한국 또한 흥행 요인은 마찬가지였다. 드라마의 인기는 OTT 열풍 가운데 국내 ‘본방 사수’를 불러왔고, 북한에 사는 ‘리정혁 동무’는 당시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 2. 일본 내 북한 인식과 드라마를 통한 인식 변화

일본에서 북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납치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 일본인들이 떠올리는 북한의 이미지는 빈곤, 비정상적 체제, 통제사회, 군사국가, 실패국가, 범죄국가 등 대부분 호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일본인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이 베일에 싸인 북한의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켰으며, 무관심으로 인한 희화화와 조롱, 낮은 역사인식으로 인한 차별과 무시 등이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일본인들이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북한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남북 분단 현실을 재인식하며 대외관계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드라마는 일본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틀 외에 다양한 인식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동안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정치·외교·안보적 측면에서만 강조되었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이면을 들추어냈다. 또한 북한 소재 콘텐츠에서의 의례적인 슬픈 결말이 아닌, 통일이 되지 않고도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결말에 대해 남북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일본 내 북한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북한 인식은 제한적이고 부정적 이미지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드라마는 북한의 정보를 ‘일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시켰고,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사고의 범위도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 전문가들은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를 통해 호기심을 느낄지는 몰라도 이것이 실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인 전문가들은 콘텐츠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는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 국한된 문제로 평가했다.

이처럼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사회의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인들의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콘텐츠를 통한 북한 인식 변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들이 국민성과 가치관의 불변성에 근거해 허구와 현실정치 영역에서의 북한을 구분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통한 북한의 인식 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 3. 한국 내 북한 인식과 드라마를 통한 인식 변화: 모순적 상호 관계와 분단국의 폐해

일본인들은 국민성과 가치관의 불변성에 근거해 허구와 현실정치 영역에서의 북한을 구분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통한 북한의 인식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이 북한을 인식하는 데 남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사랑의 불시착>이 국내에 방영될 2019년 당시 남북 관계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다시 경색되었던 때다. 우리에게 북한은 민족적 시각에서 동포이자 협력의 대상이지만, 안보

적 시각에서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적으로 규정되기도 하는 등 경계 대상으로도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대상의 이중성 때문에 모순적으로 존재하고 인식된다.

최근 한국인 전문가들의 북한 인식 또한 “서로가 서로의 현실과 정체를 알 길이 없다”는 등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분단국가에서 성장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여타 국가와 같을 수 없으며, 많은 부분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무너뜨릴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라며 분단국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한국 사회 내 반공문화가 낳은 기형적 현실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 또한 북한을 인식하는 데 특정 이미지로 획일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인들의 북한 인식은 세대와 정치성향 등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는데,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언론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언론들이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의 무관심이나 부정적 인식의 원인에 대해 대북 이슈와 관련된 대중의 피로 누적을 지적하기도 했다.

드라마 흥행에 대한 주된 평가는 자문과 고증을 통한 ‘북한 내부 모습의 사실적 묘사와 재현’에 있었다. 또한 기존 콘텐츠의 서사와는 달리 북한을 크게 미화하거나 악마화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계층의 일상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 점, 북한의 무속인, 화장품과 같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디테일한 부분을 인식하게 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드라마 방영 당시 경색된 남북 관계가 북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드라마의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소재 드

**‘북한’이라는 소재가 한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콘텐츠 자체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들이 남북 관계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북한 소재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라마의 흥행은 오히려 콘텐츠 자체로 평가받은 사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북한’이라는 소재가 한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콘텐츠 자체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들이 남북 관계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북한 소재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드라마의 인기는 의외로 ‘북한’이라는 소재와 관련성이 없으며, 드라마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또한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드라마에서 북한은 흥행을 위한 ‘판타지’적 소재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활용했을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만큼 새로운 사실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 사람 사는 것도 우리랑 비슷하네?’라는 주변에서의 반응을 전하며, 북한을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로만 알고 있던 일반 한국 국민에게 북한 주민 일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남북한을 소재로 한 한류 콘텐츠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미약하게나마 개선하고 무관심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남용될 경우 대중은 북한에 대한 일상적 피로감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의 자연스러운 일상에 대해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장기적 사회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다른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 4. 북한: 최후의 비경, 판타지의 나라

결론적으로 <사랑의 불시착>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새로운 면을 주목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이해 당사국으로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따르는 반면,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보 문제가 중심이 된다. 이에 일본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안보적 측면에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아 유동적으로 변화의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른 정치 피로감, 한국에서는 남북 관계 부침의 반복으로 인한 혼란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북한 소재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은 문화와 정치를 분리하여 인식하며 북한 소재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일본인과 한국인 전문가들은 당시 드라마를 시청한 지인들로부터 ‘북한은 정말 저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단순히 북한 정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을 상상함에 따라, 각자가 생각하는 북한의 모습은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은 정말 저래?’라는 질문은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한 반문일 수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을

## 포커스

“최후의 비경(最後の秘境)”, “판타지의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지점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2020년 3월 4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두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는 “최근 남조선 당국과 영화 제작자들이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찬 허황하고 불순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영화와 TV극들을 내돌리며 모략 선전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정작 북한에게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찬 ‘허황하고 불순’한 ‘도발행위’였던 것이다. 2020년 북한 당국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외부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볼 길이 없고, 이러한 북한은 아직 우리에게 ‘최후의 비경’이자 ‘판타지의 나라’로 존재한다.



### 하승희(河承希, Ha, Seunghee)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의 사회문화와 예술, 미디어를 주제로 연구활동과 강의를 하고 있다. 게이 오기주쿠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북한연구학회 이사, 한국언론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대표 연구로 「북·일 관계와 전자악단의 활용」(2020), 「국내 개그 유튜브 콘텐츠의 북한 재현 특성: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고농축’을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 ‘반일’과 ‘협한’을 넘어

이지원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지금 이 시각 이후부터 네 귀에 그 어떤 달콤하고 평화로운 얘기가 들려온다고 해도, 그 적(敵)에 대해서만 큼은 절대로 증오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 누가 뭐라 해도 저들은 야만인이고, 오만불손한 짐승이며, 피와 먹이를 가리지 않는 잔인한 족속이란단다. 저들은 옛날에도 우리를 처음 한 번 깎아뭇간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결정적으로 압살하기 전에는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저들이 어떻게 변하겠어? 두고 보거라. … 두고 보면 알 것이다. …<sup>1</sup>

### 1. 적, 증오, 야만, 짐승, 압살, 변하지 않음

2022년 한 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다. 위 인용 문장은 가히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증오의 마음’이라고 요약 가능하다. 그만큼 차별과 적대감으로 가득차 있다. 지속되는 ‘반일(反日)’과 ‘협한

<sup>1</sup> 모리스 르블랑 저, 성귀수 역, 2002, 『포탄 파편』 (아르센 뤼팽 전집 7), 까치.

(嫌韓)' 감정 또한 이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위 문장은 괴도 뫼리앙의 작가 프랑스의 모리스 르블랑(Maurice Leblanc)이 제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쓴 작품 『포탄 파편』의 일부다. 이 책에는 시종일관 프랑스와 독일 간의 대립과 긴장이 흐른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또 수십 년의 세월을 잊지 않고 그 원한을 갚고 만다는 줄거리다.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감정도 담긴다.

뫼리앙 시리즈는 매우 인기 있는 장르였기에 적국 혐오 및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민 동원의 역할을 자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 간 대립이 심해지면 이렇듯 대중문화와 일상의 영역에서도 차별과 증오가 팽창한다. 이러한 감정 대립 구도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같다. 우리는 인간이자 선하고 정의롭고 문명화된 존재이고, 저들은 짐승이자 악한 불의이며 야만으로 규정된다. 나아가 야만은 소멸되어도 좋은 대상이 된다.

대체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첫째, 자국의 승리 가능성이 높고, 둘째, 승리로 인해 얻을 이익이 크다고 믿을수록, 셋째, 국민적 차원에서 상대 국민을 말살해도 좋은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커진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으로 갔다.

우리는 인간이자  
선하고 정의롭고  
문명화된 존재이고,  
저들은 짐승이자  
악한 불의이며  
야만으로 규정된다.

## 2. 전근대 조선의 일본 차별

반일과 혐한 현상의 배경에는 역사적 이유와 계기가 있다. 오래 전 고대의 일은 제쳐 두더라도,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이 벌어진 조선시대부터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과 일본은 모두 명을 중심으로 한 책봉체제하에서 통신사와 국왕사를 주고받는 선린관계를 맺었다. 잘 알고 있듯이 조선통신사는 일본 곳곳에 문물을 전파했고, 현지 대중과도 많은 접촉을 가졌다. 그래서 한일 우호선린의 상징이자 ‘한류’의 기원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었다. 유교 이념의 신봉자였던 통신사들은 일본의 이질적인 풍습과 문화를 용납할 수 없었다. 통신사들은 대로변에서 남녀가 버젓이 상열(相悅)하는 것, 기녀(妓女)들의 호객 행위, 사촌 간의 혼인,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처로 삼는 풍속에 기겁하며 “음예지행(淫穢之行) 변동금수(便同禽獸)”[신유한, 『해유록(海遊錄)』]라고 개탄했고, 각종 의례도 수준이 낮다고 ‘금수지역(禽獸之域)’이라며 동물 취급하였다[이경직, 『부양록(扶桑錄)』].

또 일본이라는 호칭보다는 ‘왜(倭)’라는 멸칭을 고수하였다. 대마도의 유명한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州)가 ‘왜인’이 아닌 ‘일본인’이라 불러달라고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통신사의 기록에는 왜인(倭人), 왜선(倭船), 왜관(倭館), 왜학(倭學), 중왜(衆倭), 군왜(群倭) 등의 호칭이 계속 사용되었다. 물론 청결함과 위생, 질서감각 등 일본의 좋은 점도 기록했지만 조선은 유교문화를 기준으로 일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견지했다.

이러한 관념은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 및 차별에 대한 반발과도 결합하여 ‘왜’를 접두어로 하는 어휘들로 재생산되었다. 현재 이러한 차별의식

은 상당히 약화되었으나, 그 잔재는 이따금 확인된다.

### 3. 근대 일본의 한국 차별

19세기 말 제국주의시대에 이전의 구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유교문명에서 ‘선진’임을 자부하던 소중화(小中華) 조선을 대신하여 구미의 근대문명을 앞서 수용한 일본이 우위에 선다. 이웃 나라들을 문명의 경지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며, 일본은 ‘문명’, 청과 조선은 ‘야만’이라는 구도가 설정되었고, 청일전쟁은 “세계문명을 위한 싸움”, 이른바 ‘문명 대 야만’의 전쟁으로 규정되었다.

일본인들에게 조선인들은 더럽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거리의 인분과 악취, 주막의 더러운 부엌, 길가에서 낮잠 자는 모습 등이 그 사례였다. 가장 극단적 사례는 ‘인류관(人類館) 사건’으로, 1903년 오사카에서 열린 제5회 내국권업박람회에서는 아이누, 대만의 고산족, 류큐인, 자바인 등과 함께 조선 여인 2명이, 1907년 도쿄권업박람회에서도 조선인 남녀가 전시되었다. 사람을 동물처럼 관람시킨 당시의 제국주의적 차별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의식은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도 재생산되어 ‘일본 국민은 다른 극동의 국민보다 뛰어나다’ 86%, ‘조선은 적어도 20년간은 독립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77%로 답할 정도였다(1945년 말 베이징 거주 일본인 수백 명 대상, 미국 국무부 실시 설문조사). 지난 수십 년간 종종 터져 나왔던 일본 측 일부 인사들의 망언은 이러한 관념의 잔재다. 이렇듯 한일 양국 간에는 상대방 및 그 문화를 ‘야만’으로 취급한 역사가 있다.



#### 1970년대 제주시청

“반일하여 OO하고 저축하여 자립하자”는 구호가 보인다. 『제주매거진 RE: I REBORN』 2019

## 4.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의 흐름

해방 후 한국에서는 독립한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대대적인 ‘왜색’ 청산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일본과 가까워졌으나 문화적으로는 ‘왜색’ 비판 및 반일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만 해도 반공과 함께 반일 표어도 곧잘 눈에 띄었다.

1980년대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극일’ 언설도 확산되었다. ‘감정적 반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배울 것은 배우면서 국력(특히 경제력)을 배양하여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었으나, ‘반일’과 ‘극일’이 확연히 구분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거의 반세기 동안 강력한 반일 기조가 지속되었다. 여기에는 두 갈래의 흐름, 즉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정치적 동원 측면과, 대중의 역사적 원념(怨念)과 트라우마에 의한 측면이 뒤섞여 있었다. 또한 남북 분단의 현실과 국력 및 생활수준에서 일본과의 격차도 콤플렉스로 작용하였다.

반면, 이 시기 일본의 대중은 한국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했다. 정권 차원에서는 정치안보적 이유, 기업 차원에서는 경제적 이유에서 한국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대중적 차원에서는 그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 5.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공감대와 긴장의 길항

한일 간 차이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좁혀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경제성장, 민주화, 문화다원화, 여행자유화가 이루어졌고, 탈냉전과 정보화, 지구화와도 맞물려 대중의 외유가 늘고 견문이 넓어졌다. 이웃인 한일 간의 민간교류와 소비도 급증했고, 편견과 오해도 축소되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및 한류 유행의 기반이 되었고, 서로의 문물을 즐기며 공감대가 커졌다. 물론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도 대두된 시기로 반일 기조 역시 지속된다. 하지만 과거 정부나 몇몇 지식인의 언설, 부모세대의 기억에 좌우되었던 것

한일 간의 민간교류와 소비도 급증했고, 편견과 오해도 축소되었고, 서로의 문물을 즐기며 공감대가 커졌다.

대신에 스스로의 체험과 학습에 바탕한 객관적인 일본 인식이 증가했다.

한편, 일본은 탈냉전 이후 국가의 향방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들어선다.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의 압박을 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화해 공존하려는 기류와, 과거사를 부정하고 국가주의를 강화하려는 기류 간의 긴장, 대립이 커진다.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이 전자의 사례라면, 자유주의 사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일본회의 등은 후자의 사례이다.

21세기 들어서는 이 기류가 각각 업그레이드된다.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드라마 <겨울연가>를 기폭제로 한 한류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동시에 불화의 계기로도 작용했다. 월드컵을 통해 한국인 내에 여전한 반일 정서를 발견한 것은 일본 내 혐한이 대중화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한류가 크게 일며 일본의 TV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높아지자 반발도 늘어났다. 한국은 한국대로 독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욱일기 등의 쟁점에 반발하면서 반일 기류가 재생산되었다.

아마도 동아시아 화합이 표방되었던 마지막 시기는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내각 집권 때일 것이다. 중국, 한국과의 교류 확대 및 동아시아 공동체에도 관심을 가졌던 하토야마의 전망은 현실 정치의 벽에 이내 좌절되고 만다. 이후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을 넘어 세계 2위로 부상한 대전환과, 2011년 3·11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원전 사고라는 대재앙을 겪은 후,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섰다. 이후 약 8년간의 장기집권하에 국가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평화국가’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으로 탈바꿈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일 격차는 더욱 좁혀졌고, 실질임금과 1인당 구매력 기준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극일’도 일부 실현되었지만, 일본 내

에서 ‘혐한’ 기류가 더 확산된 것도 현실이다. 또 K-POP과 드라마, 패션과 미용, 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한류가 인기를 끌며 MZ세대 여성층 위주로 영향력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혐한’ 서적과 TV 및 인터넷상의 한국 비하 콘텐츠 등 그에 반하는 기류도 증가하였다. 그 정점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동원 문제 판결에 반발한 2019년 아베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였다. 이는 한국 측의 대반발과 노재팬(No Japan)운동,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의 사태를 초래했고, 한일 관계는 최악을 맞이했다. 뒤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왕래마저 끊기며 양국 간의 거리는 더욱 소원해졌다.

## 6. 새로운 관계 회복의 시도와 난관

한일 관계는 종종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관계의 악화나 개선 여부가 이야기되는데, 중요한 것은 대중 속에 면면히 흐르는 역사적 경험과 정서의 향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한일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다. 한일 양 국민은 가장 방문하고 싶은 해외 여행지로 각각 일본과 한국을 꼽고 있다. 여러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경제적 이점과 안전성, 매력적인 문화적 아이템과 소비재를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종종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관

계의 악화나 개선 여부가 이야기되는데, 무엇이 싫고 좋은지, 내용과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은 단순한 선호도 조사는 주로 그때그때의 정부 간 관계, 매스컴의 보도 내용과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만큼 쉽게 변화 가능하다는 말도 된다. 가령 2022년 한국의 정권 교체 후 일본의 한국 선호도는 상승했다. 하지만 이를 곧 양국 간 관계 개선이라고 보는 것은 표면만 보는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 처리를 놓고도 논란이 들끓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중 속에 면면히 흐르는 역사적 경험과 정서의 향방이다.

한국의 경우는, 역사적 연유에서 반일이 장기 지속되었으나 유교적 차별의식과 왜색 비판론은 1990년대 이후 급감하였고, 일본 체험과 교류가 늘면서 객관적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관심이 지배적이었던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류뿐 아니라 혐한 기류도 새로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의 차별의식이 잠복했다가 부활했다기보다는 현재 일본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이해관계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일과 혐한 관련 배제와 차별의 자극적 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해관계의 각축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의’, 상대의 입장을 ‘불의’로 단정하는 인식인데, 그 결과 반감과 혐오가 증폭되는 것이다.

## 7. 반일과 혐한을 넘어설 이성과 감성

실제 귀책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든, 혹은 내부 불만을 상대 탓으로 돌리든, 그 두 가지가 뒤섞이든, 혐오의 대중적 회로가 한 번 이어지면 끊기 힘들어진다. 확대 재생산은 더더욱 위험하다. 일본 측에서 ‘혐한’의 원인은 ‘반일’이라 하니, 한국 측은 ‘반일’의 원인이 일본의 ‘침략’과 ‘반성 결

여'라며 반발한다. 그 반발을 바탕으로 삼아 또 '협한'이 성장하고, 그 '협한'이 다시 '반일'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지난 십여 년간 이어졌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냉정하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치가나 한일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 차원에서도 점점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상당수 쟁점의 근원은 샌프란시스코체제 및 1965년 한일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양국 간 관점의 차이는 물론 자국 내에도 견해차가 있어 쉽게 해소하기 힘들다. 한 가지 쟁점이 봉합된다 해도 또 다른 이슈로 갈등이 재발할 여지가 늘 존재하기에 더욱 더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혐오와 적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역할하는 감성 또한 필요하다. 봄날의 새싹 같은 감성의 존재. 여기서 한일 관계와 아주 같지는 않지만, 20세기 전반 서로 야만시하며 총을 들었던 독불 관계의 또 다른 사례를 마저 보자.

**혐오와 적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역할하는 이성과  
감성이 필요하다.  
또한 '반일'과 '협한'의  
완화가 또 다른 대상에  
대한 반감과 증오의  
강화로 가서는  
안 된다.**

2022년 초 그녀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생겼을 정도로 프랑스 대중에게 사랑받은 샹송 가수 바르바라(Barbara)는 어릴 적 나치의 기억도 있어 마지못해 갔던 1964년 서독 괴팅겐(Göttingen) 공연 시 독일 관중의 엄청난 환대에 감동받아 체류를 연장하며 <괴팅겐>이라는 곡을 만들어 불

## 포커스

렀다. 이후 이 노래는 양국 간 화해의 상징이 된다. 괴팅겐시는 명예훈장을 수여했고,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노래의 일부를 옮긴다.

O faites que jamais ne revienne	오 절대 다시 오지 않기를
Le temps du sang et de la haine	피와 증오의 시간
Car il y a des gens que j'aime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A Gottingen, a Gottingen	괴팅겐에, 괴팅겐에
Et lorsque sonnerait l'alarme	사이렌이 울리고
S'il fallait reprendre les armes	다시 무기를 들어야 한다면
Mon coeur verserait une larme	내 마음은 눈물을 흘릴 것이네
Pour Gottingen, pour Gottingen	괴팅겐을 위하여, 괴팅겐을 위하여

끝으로 덧붙이자. ‘반일’과 ‘혐한’의 완화가 또 다른 대상에 대한 반감과 증오의 강화로 가서는 안 된다. 소용돌이치는 세계정세 속에서 동북아 민초들의 현명한 행보가 절실하다.



### 이지원(李志遠, Lee, Chiwon)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도쿄대학 사회정보연구소 및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였다. 2005년 이래 한림대학교에서 일본 사회문화를 가르쳐 왔고, 한일 문화교류, 일본 시민사회, 오키나와 현대사 관련 논문 및 저·역서가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에너지협력 가능성의 모색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1. 머리말

기후위기의 심화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개발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적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표면화된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 등으로 인해 지금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말 그대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다. 에너지의 범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각종 녹색기술로까지 확장되면서 필요한 자원도 다양해졌는데, ‘미·중·러 삼극체제(tripolarity)’<sup>1</sup> 속에서 복수의 행위자들이 저마다 지경학적 게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렇게 복합 위기상황인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만한 소재를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임은정, 2023, 「[EE칼럼] 한일 셔틀외교 복원, 에너지 협력으로 이어지길」, 『에너지경제신문』(2023. 3. 22)에 실린 바 있다.

<sup>1</sup> ‘미·중·러 삼극체제’에 대한 연구는 임은정, 2023, 「미·중·러 삼극체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35-1, 59~8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호류사(法隆寺)**

삼국시대 도래인들의 영향을 받아 백제 건축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백제관음상이 모셔져 있다. 일본 나라(奈良), 필자 촬영(2017. 11. 4)

독자들 중에는 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구심의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이 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고대부터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사이이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인들의 자유와 영혼은 무참히 짓밟혔고, 그 앙금과 남겨진 현안은 여전히 너무도 복잡해서 단숨에 풀기가 어렵다. 그런데다가 일본의 우경화와 수정주의적 역사의식

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느끼게 한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과 일본은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능할 만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 아니라 체제 유사성이 높아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협력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두 경제대국이 국제분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면 이는 양국 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기에 협력의 소재를 발굴하기가 용이하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어 일정 정도의 시차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 차이가 좁아져 역전 상황이 발생한 분야마저 있다. 이제 두 나라의 격차보다는 여러 유사점에 주목할 시기가 온 듯하다.

아시아의 두  
경제대국이 국제  
분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면  
이는 양국 관계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사료된다.

## 2. 에너지 및 주요 문제에 대해 한일이 처한 현황과 협력의 필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무엇보다 두 나라 모두 제조업을 강점으로 하여 수출로 국부를 키워 왔고 기술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며 선진경제를 달성해 왔는데, 두 나라 모두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두 나라는 에너지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 예컨대 1970년대에 발생했던 두 번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모두 중동에서의 석유 수입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원자력에너지를 국책으로 삼게 되었다.

한편 두 나라는 모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공공연하게 하고 이를 법제화한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본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전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두 나라 모두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룬데다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아울러 한일 모두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양국이 강점으로 삼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원자재로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전력 생산을 위해서도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두 나라의 탄소 배출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에 달한다. 요컨대 양국이 모두 지금의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 부문의 혁신적인 탈탄소화가 시급하다.

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력 생산 부문에서 저탄소에너지원, 즉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일 수 없다. 두 나라의 에너지시장은, 일본은 완전히 자유화되었고 한국은 부분적으로만 자유화되었다는 차이가 있는 하지만, 송배전과 관련된 전력 계통 부문은 관할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기업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대량으로 소비하는 지역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기 때문인데, 전력 계통 구조가 수직적이면서 경직되어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흐름에 부합하여 전력망을 유연하게 혁신하기가 녹록치 않다. 두 나라 다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는 프로슈머(prosumer)가 활발하고 자유롭게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 설비를 개선하고 시장 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인 것이다.

두 나라의 상황에서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가 운송과 건물 부문이다. 전기차는 그 자체가 축전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택에 장착한 태양광 패널이 생산하는 전력 중 잉여분을 저장하는 기능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과 모빌리티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전력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도 저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추진할 때에 두 나라 모두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매우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다.<sup>2</sup> 또한 두 나라 모두 출산율이 매우 낮은데, 한국의 출

고민과 과제가 비슷한  
두 나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일은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산율이 일본보다도 더 낮다.<sup>3</sup> 1인 가구 비중도 한국의 경우 2021년에 처음으로 40%를 넘겼으며, 일본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구구조에 변화가 크다 보니, 주택의 형식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의 행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수도권 대 지방 간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른바 ‘지방 소멸’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글로벌화와 함께 도시화가 심화되는 현상의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의 과소화를 더욱 가속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고도성장기의 관념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형 구조물을 짓고 대형 케이블을 깔고 대형 발전소를 짓는 것은 이미 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리드의 혁신을 통해서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4차 산업혁명 사회로 갈 준비가 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고민과 과제가 비슷한 두 나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일은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2 2022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17.5%와 29.1%인데, 한국은 2025년에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660.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660.html)).

3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 일본의 출산율은 1.33이다([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4/14/2023041402222.html](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4/14/2023041402222.html)).

### 3. 각 분야별 한일 간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 (1) 천연가스 분야

먼저, 무엇보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천연가스 분야의 협력을 꼽을 수 있겠다. 석탄에 비해 탄소 및 유해물질의 배출이 적은 가스는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EU)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가스를 포함시킨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륙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액화천연가스(LNG)로만 가스를 운반해 왔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운송가스(PNG)에 비해 액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운송에서 발송하는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해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지불해 왔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스를 둘러싼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에 공급해 오던 PNG에 더해 LNG 시장에서까지 그 입지를 키워 나가려던 차에 우크라이나전쟁을 일으키며 제재를 받게 되면서 입지가 축소되었고, 그 틈에 미국이 LNG 시장에서 최강자로 등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산 LNG의 최대 수입처였지만, 탈(脫)러시아산 가스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럽 시장에서 미국산 LNG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미국산 LNG 최대 수입국이 모두 유럽 국가가 되었다. 이제 미국산 LNG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같은 거대 수요국 외에 유럽 국가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이 유럽과 동아시아 양쪽 모두에게 적정가격으로 가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일본은 에너지안보를 이유로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지 않고 러시아산

가스 도입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결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의 수입 비중을 늘리거나, 전쟁의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러시아산 가스를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고 할 때, 한국과 일본이 협력적으로 행동하여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공급국들에 레버리지(leverage)를 키울 필요가 있다. 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제7광구'로 불리는 한일공동개발구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논의도 재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 (2) 원자력에너지 분야

원자력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일정이 공표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일본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금 많이 나빠진 상황이다. 일본 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과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어업 종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도 오염수 문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원자력 대국인 만큼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고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자로 수출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부분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인데, 미국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어 가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이란 같은 중

동 국가들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인도에서도 원자로 수출을 추진해 왔고, 중국도 이미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연계하여 원자로를 건설했다. 일본은 후쿠시마사고의 여파로 원자력업계에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미국은 자국 내 건설이 정체되면서 해외 수출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관련 기술은 국가안보적인 차원은 물론 글로벌 비확산 레짐(regime)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한미일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핵 안전과 비확산 같은 규범의 확산에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대학 간, 기업 간, 연구기관 간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에 엄청난 규모로 원자로들이 지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중국과 원전 안전 공동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도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혹시라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에게나 일본에게도 직격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다른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동북아시아에서의 원자력 안전규범을 확립하는 데 한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3)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많지만, 함께 협력할 소재들도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많은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을 필요로 한다. 핵심 광물의 조달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두 나라로서는 수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외 광물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자원 보유국들 사이에 자원

---

## 포커스



무쓰오가와라 국가석유비축기지(むつ小川原國家石油備蓄基地)와 풍력단지 전경  
일본 아오모리(靑森) 룩카쇼무라(六ヶ所村), 필자 촬영(2011. 9. 6)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현장 가는 길  
일본 후쿠시마(福島), 필자 촬영(2018. 6. 1)

민족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자원 보유국과의 관계에서 경쟁할 소지도 많다. 그러나 이런 경쟁 상황이 있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공격하는 행동만큼은 자제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우대 조치를 박탈했던 것 같은 행위는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서로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아울러 그린수소(green hydrogen)나 암모니아 같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수소 제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제조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모두 국토나 기후조건상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제조하기가 녹록치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소 조달 역시 호주나 중동 같은 지역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린수소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은 물론 글로벌 수소 공급망이나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공급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서로 잉여분에 대한 스와프(swap)를 체결하는 방법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고려해볼 직하다.

#### (4) 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분야

자원 재활용이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부분도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다. 유럽의 경우 순환경제적인 관점에서 배터리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배터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이른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

---

## 포커스

본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정책적 접근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부존자원이 부족하기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효율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한국 역시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특히 두 나라의 철강 부문은 줄곧 세계 1, 2위를 다투어 왔다. 이런 분야에서도 양국이 서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 (5) 건축물 및 도시 구성 분야

마지막으로 건축물이나 도시 구성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 하였던 두 나라 모두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 소멸 등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국토 및 기존 인프라의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사회가 공히 달성해야 하는 것이 건물의 탈탄소화 혹은 제로에너지빌딩(ZEB)이나 제로에너지주택(ZEH)의 확산이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상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성공사례를 통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한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만큼 정책적 고민의 지점도 매우 비슷하다. 이런 두 나라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유럽 국가들이 EU라는 기제를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 온 것

## 포커스

두 나라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유럽 국가들이 EU라는 기제를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 온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교류와 기업 간의 협력,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같은 활동이 역사 문제나 정쟁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권과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두 나라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두 나라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훌륭한 파트너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임은정(林恩廷, LIM, Eunjung)**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연구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안보, 원자력정책과 비확산 문제 등이다. 이화외고 중국어과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하여 컬럼비아대학에서 국제학 석사학위,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한일협정 관련 자료집 발간에 대하여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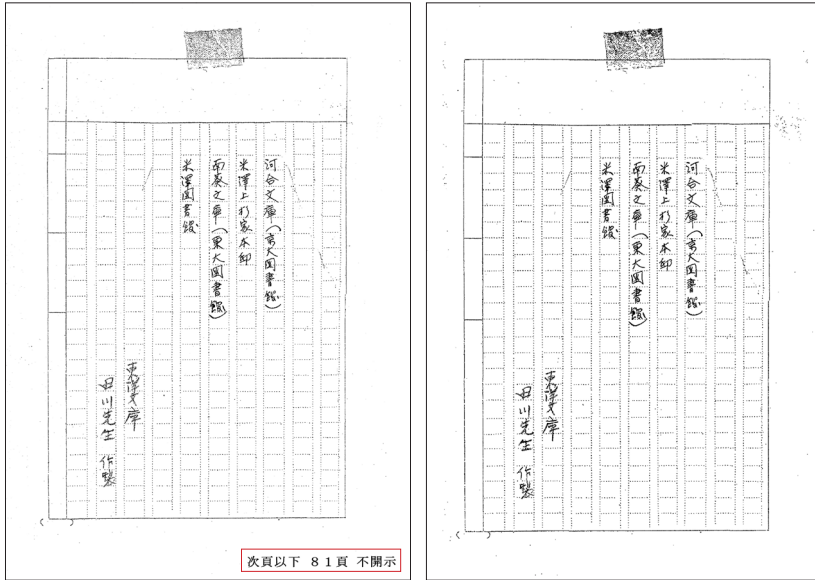
## 1. 머리말

2025년이면 19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한일협정’의 협상과정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소송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2023년 6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1965년 ‘한일협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 및 미래의 한일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는 양국 시민단체의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99명은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청구권 관련 문서 5권을 2005년 1월 17일 1차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 내에서 회담 관련 외교문서에 관해 6개월간의 심사 작업을 거쳐 마

‘한일협정’의 협상  
과정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소송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2023년  
6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 연구동향



### 일본 외교문서 공개 사례

왼쪽은 2008년 공개 문서, 오른쪽은 2014년 추가 소송에 따른 승소 결과 공개 문서

침내 2005년 8월 3만 5,000장에 달하는 문서를 한 장도 빠짐없이 공개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 시민단체 ‘일한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하여 2008년 6만 페이지의 외교문서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때 일본에서 공개한 문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먹칠되어 있는 등 핵심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시민단체는 다시 추가 소송을 몇 차례나 제기하였고, 결국 2015년까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약 9만 장의 공개가 이뤄졌다.

한일 양국이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그간 세간의 수많은 억측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일회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

인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한일회담의 전체 모습 및 핵심 쟁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결정적인 1차 자료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의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동북아역사넷(contents.nahf.or.kr)에 게재했다.

양국 외교문서를 통해 한일회담 관련 양국 입장 비교도 가능하다. 외교문서는 본회의, 기본관계, 어업관계, 청구권관계,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 등 한일회담의 핵심 쟁점을 이루는 의제에 관한 분과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 일본과 주고받은 회의록, 일본과 한국의 내부 입장, 검토 자료, 언론보도 기사, 국회 동향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재단에서는 한국외교문서 3만 5,000장과 일본외교문서 약 9만 장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였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이다.

한일회담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한일회담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1945년 이후 한일관계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그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풍부한 외교사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회담의 전개과정과 그를 둘러싼 국내정

외교문서는 본회의, 기본관계, 어업관계, 청구권관계,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 등 한일회담의 핵심 쟁점을 이루는 의제에 관한 분과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 일본과 주고받은 회의록, 일본과 한국의 내부 입장, 검토 자료, 언론보도 기사, 국회 동향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치 및 국제정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한일관계사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한일회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한일 관계가 당면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한일 외교의 정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실천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일회담에서 논란을 벌였던 청구권 문제는 과거에도 핵심 이슈였지만, 일본의 35년간 조선 식민 통치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비롯해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때 한일회담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정리하고 이를 학자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일은 오늘날 한일 관계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재단이 지금까지 발간한 한일회담 관련 자료집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한일회담 관련 한국외교문서 자료집의 주요 내용과 의의

### (1)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V의 발간

2008년 재단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와 함께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V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3만 5,000장 전체 문서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외교문서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는 데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 이 해제를 읽고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원문에 접근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원문은 종이 상태가 불량이라 해독이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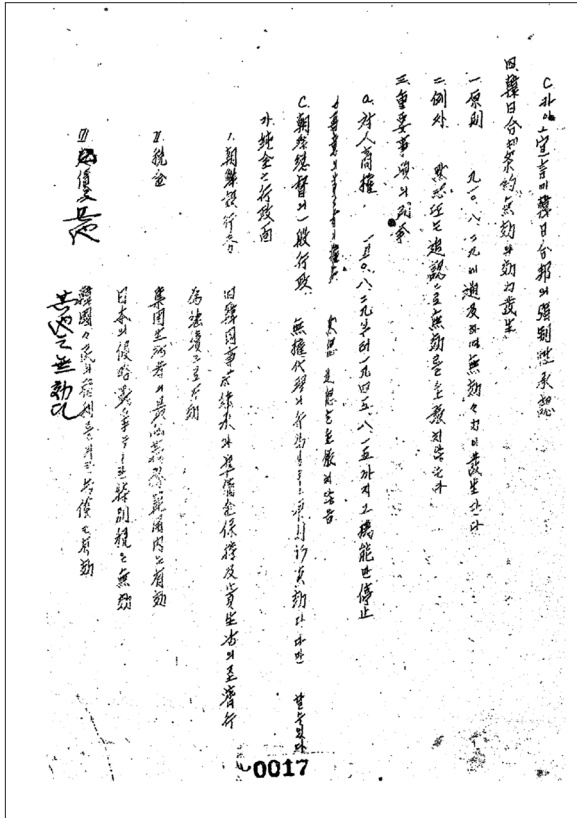
## 연구동향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V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V 권별 구성

권	주제	문서 건수	문서 매수
제1권	예비회담~제5차 회담	257	7,730
제2권	평화선·복송·6차 회담 (예비교섭·청구권)	1,863	7,332
제3권	제6차 회담	2,314	8,476
제4권	고위 정치회담 및 제7차 회담 (법적지위·어업관계·문화재)	1,598	6,399
제5권	제7차 회담(기본관계·청구권·협정체결)	1,450	6,029



한일회담 예비회담 외교문서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1950)

1950년대 초 작성한 외교문서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일회담에 임해야 했던 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그대로 전해진다. 종이 질도 지금과 비교하여 형편없다. 협상에 참석한 교섭 담당자가 쓴 필기 한 줄 한 줄에서 비장한 각오가 그대로 전달되기도 한다. 아쉽게도 195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 필기체보다 대부분 타이핑으로 되어 있어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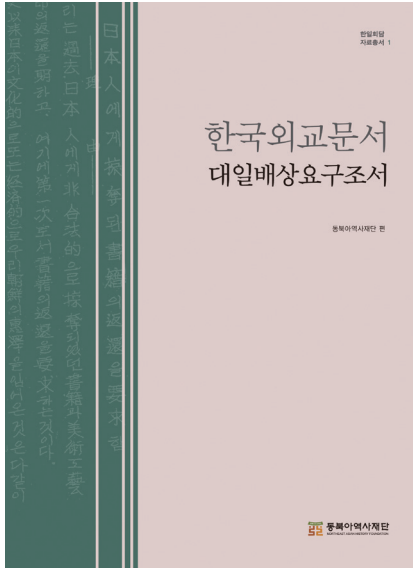
한국외교문서는 양국의 회의록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일본외교문서에는 회의록에 먹칠이 된 경우가 다수 보이는데 이는 한국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전 5권)이 나온 후 한국외교문서는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이 재단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이용 가능하다. 한국외교문서를 통해 회담 타결과정과 쟁점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2) 『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의 발간

이 자료집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작성한 첫 번째 식민지 배상청구서를 수록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한국에서 식민지 청산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였다. 한국 정부는 대일배상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제강점기 피해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금융계가 중심이 되어 작성했고, 한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여 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와 미국 국무성에도 전달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좌절되었지만, 이 자료는 일본과의 청구권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대일 8항목의 기원이 된다.

한국 정부가 최초로 작성한 1949년판 「대일배상요구조서」(이하 요구조서)는 필사 상태가 좋지 않고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인명, 도서명, 연도 등이 잘못 기재 된 경우가 많다. 1954년에 한국 정부가 청구권 교섭 과정에서 이를 다시 필사하였다. 당시의 인쇄기술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1949년판을 잘못 필사한 사례,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다시 필사한 사례 등이 있는데 재단에서 발간하면서 원문의 오류나 오타자가 발견되면 각

# 연구동향



編年表	金額	債權決定時期	賠償方法	備考
273	1,790 00	44000 1793.54 45000 1939 日本文額 4,100.00, 內韓金 4,100.00, 韓幣 1793.54 輸入, 日金 4500 未償 日本文額 5,797.00	大正賠償株式會社	
	3,204 66	日本文額 100.00 日本文額 5,797.00		
	796 45	日本文額 1577 日本文額 736.55	日本文額 東京第一 賠償株式會社	
	67 40	日本文額 1598 日本文額 47.40	金剛山炭礦株式會社, 濟州 陸軍配 給所	
	546 84	日本文額 2964 韓幣 199kg	朝鮮帝國工業聯合會	
	20,000 00	日本文額 19,000 日本文額 20,000.00	大日本電信會社	
274	1,248 17	日本文額 987 日本文額 987.00 日本文額 31,346.40, 全額 韓品 中 不償 及 平治物產品 法賠償金	大日本銀行	
275	14,250 00	日本文額 14,250 日本文額 14,250.00	大正賠償株式會社	
	17,250 00	日本文額 17,250 日本文額 17,250.00	大正賠償株式會社	
	15,728 00	日本文額 15,728 日本文額 15,728.00	朝鮮鐵道株式會社	
	9,250 00	日本文額 9,250 日本文額 9,250.00	大正賠償株式會社	

212 韓日外交文書 1

編年表	金額	債權決定時期	賠償方法	備考
276	6,150 00	日本文額 2533.2534, 2537 日本文額 1200.00, 內韓金 1200.00, 韓幣 500.00 日本文額 18,450.00	大正賠償株式會社	
	8,700 00	日本文額 11346.11149 日本文額 20,000.00		
	15,882 68	日本文額 6499.4963 日本文額 4937.504, 1,000.00, 4938 1004.5000 日本文額 64,100.00, 內韓 214,604 日 本金 2,280.00, 2004.12, 2757 韓品, 800 日本文額 533.88	朝鮮鐵道株式會社	
	533 85	日本文額 5011 日本文額 177	朝鮮鐵道株式會社	
	4,132 00	日本文額 4,132 日本文額 4,132.00	金剛山炭礦株式會社	
	3,244 50	日本文額 2696 日本文額 2696.00	大正賠償株式會社	
	2,492 40	日本文額 2,492 日本文額 2,492.00	大正賠償株式會社	
	286,995 20	日本文額 286,995 日本文額 286,995.00	大正賠償株式會社	
	58,365 89	日本文額 58,365 日本文額 58,365.89	大正賠償株式會社	
	66,494 75	日本文額 66,494 日本文額 66,494.75	大正賠償株式會社	
	152,646 70	日本文額 152,646 日本文額 152,646.70	大正賠償株式會社	
	14,500 00	日本文額 14,500 日本文額 14,500.00	大正賠償株式會社	
	419,236 73	日本文額 419,236 日本文額 419,236.73	大正賠償株式會社	
	2,198 20	日本文額 2,198 日本文額 2,198.20	大正賠償株式會社	
	6,076 96	日本文額 6,076 日本文額 6,076.96	大正賠償株式會社	
	133,911 28	日本文額 133,911 日本文額 133,911.28	大正賠償株式會社	
	3,144 60	日本文額 3,144 日本文額 3,144.60	大正賠償株式會社	

總計 二〇〇七〇八八.一五 (韓幣換算)  
備考: 賠償金決定時期表(第二卷)參考

大正賠償株式會社 215

『한국의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주를 통해 바로잡았다. 총 52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대일배상요구조서」가 작성된 때는 일제강점기에서 막 벗어난 시기인 만큼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 당시 작성된 문화재 조사목록은 후일 문화재 반환교섭에서 잘 활용했고 반환 문화재 목록에 포함됐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도 한일청구권 교섭에서 그대로 등장한다. ‘요구조서’는 일본에게 받아야 할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추적하여 작성한 문서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교섭을 앞두고 일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료집을 읽으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청구권 교섭의 법적·역사적·이론적 자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 (3)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 I ~ V의 발간

이 자료집은 2015년까지 공개된 외교문서를 정리하여 주제별, 작성 시기별로 분류·정리한 것이다. 일본외교문서 원문도 한국외교문서와 동일하게 동북아역사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와 주제가 모두 뒤섞여 있었다. 일본 외무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대한 문서군을 단시일 내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문서를 가급적 작성 시기와 주제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한일회담 한국외교문서와 비교도 가능해졌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은 상세목록 자료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문서를 한 장 한 장 검토하면서 분류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작업이었다. 발간된 자료집은 난해한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 I ~ V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2)

문장을 한국외교문서와 비교 검토하면서 체계적으로 분류한 자료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외교문서는 한국외교문서와 달리 비공개되거나 먹칠된 문서가 많다. 특히 독도 관련 문서, 일본 대장성과 외무성의 청구권 금액 산정 부분 등 내부 검토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다. 그럼에도 문서에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한일회담 개별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내부 토의 현황이나 방침,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미국과의 조율과정, 대한정책의 수립과정과 집행의 구체적인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일본의 대한정책 수립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이 작성한 한일회담 외교문서는 일제강점기를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으로 회담에 임했고 추진했는지가 드러나

일본이 작성한 한일 회담 외교문서는 일제강점기를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으로 회담에 임했고 추진했는지가 드러나 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부족한 부분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앞으로 협력해야 할 일본, 경쟁해야 할 일본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 자료집은 가치가 있다.

있다. 일본은 한일회담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적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정부의 부족한 부분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앞으로 협력해야 할 일본, 경쟁해야 할 일본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 자료집은 가치가 있다.

#### (4) 『독도 관련 일본측 외교문서 해제집(1952~1969)』의 발간

일본외교문서에서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52~1969년까지의 독도 관련 자료만을 선별하여 별도의 자료집으로 간행했다. 해당 시기 독도 관련 문서는 35건, 2,750쪽이다. 한일회담 문서 중 독도 관련 비공개 문서는 1건이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관련 움직임은 3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 이뤄진 1952년 평화선 선포부터 1960년대까지로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을 굳힌 시기다. 제2단계는 청구권 문제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1961년부터 1963년 무렵까지로 일본이 ICJ 제소 이외의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기다. 제3단계는 1964년부터 1965년까지 한일회

답이 최종적인 타결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독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내부적 논의를 한 단계다.

제1단계에서 일본의 독도정책은 미국과의 협조라는 틀로 형성되어 왔으나 이승만의 평화선 선언에 대하여 미국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개입을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으나 미국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일본은 유엔 상정 등 국제적 무대를 통한 압력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 역시 미국은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ICJ에 의한 해결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이 ICJ 제소를 제안한 것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한국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 반면 한국은 무력을 통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의도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은 독도 문제가 국교정상화보다 우선하지는 않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을 중단한다는 각오로 임했지만, 일본은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보다 큰 국익에 비해 덜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협상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정하려고 했는데 독도 영유권을

일본은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개입을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으나 미국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일본은 유엔 상정 등 국제적 무대를 통한 압력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 역시 미국은 지지하지 않았다.

해결하기보다는 국회 등 국내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의 측면이 강했다. 즉 해결 자체보다는 해결방식에 대한 합의를 매우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 (5)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의 발간

이 자료집은 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국과의 교섭을 담당한 대장성 이재국 외채과가 1963년 6월 작성한 자료를 번역하여 발간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외무성은 교섭 파트너였지만 청구권 이슈의 대부분은 일본 대장성 소관이였다. 대장성은 2001년 재무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대장성 문서는 일본 공문서관(公文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원문은 대장성, 1963, 『경제협력·한국(25-28), 일한청구권문제의 개요』(1분책~4분책)이다.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일괄 타결방식으로 해결됐지만 대장성이 청구권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최종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오늘날 청구권 해석을 둘러싼 양국 인식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주장에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부처가 대장성이였다. 협상에 참가한 외무성 관료는 청구권 교섭에서는 한국과의 교섭보다 대장성과 교섭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대장성은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처리하고 싶어했다. 대장성은 김종필·오히라(大平) 메모로 청구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에도 내부적인 불만이 많았다. 외무성이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정치적 협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대장성 관계자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정치적으로 합의되는 동안 대장성은 사무적으로 전혀 관련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외무성과의 논의도 없었다.

대장성은 외무성이 정치적 타결, 즉 경제 협력을 수반한 결과에 따라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적으로 한국의 청구권은 일본 대장성과 관련이 깊다. 청구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후 일본 대장성은 한국과의 교섭과정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생겼고,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자료가 작성되었다.

대장성은 외무성이 정치적 타결, 즉 경제 협력을 수반한 결과에 따라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적으로 한국의 청구권은 일본 대장성과 관련이 깊다. 청구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후 일본 대장성은 한국과의 교섭과정 등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생겼고,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자료가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청구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제5차 회담인 1960년대 초부터 제6차 회담 초(1963년 6월)까지의 한국과의 교섭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여기에는 한국이 주장한 5항목 ‘한국법인,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

대장성은 한국의 청구권을 완전하게 소멸시키지 않으면 후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인의 대조선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하고자 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일본 내부 검토에서는 한국의 청구권을 어떻게 소멸시켜야 하는지, 도대체 청구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개인의 권리까지 여기에 포함되는지 등 혼란스러워했다. 대장성은 지금 나오지 않은 청구권 문제도 후일에 발생할 수 있고 청구권의 권리까지 가능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소멸을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한일청구권협정 조문 협정과정에서 다른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결론

재단의 한일회담 자료집은 2025년 총 30권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년이라는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은 험난함의 연속이었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의제는 아니었으나 교섭 내내 양국의 역사인식은 충돌했다. 따라서 현재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 한일회담에서 기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인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 문제, 사할린 동포의 한국 귀환 문제, 재일한국인 원폭 피해자 보상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 이슈들이 한일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으며 한일협정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한일협정은 회담과정에서 교섭 당사자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문제에 대응했는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다. 한일 과거사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과거사 문제도 서로가 협력해야 해결 가능하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도 1차 자료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과학적 분석 및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단이 발간하는 한일회담 자료집은 한일 외교문서를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검토·정리하여 주요 쟁점별, 시계열적으로 분류한 자료집이다.

---

## 연구동향

재단은 과거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의 실증적 파악이 향후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된다는 점에서 자료집 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자료집들이 연구자, 나아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이용되기를 희망한다.



### 조윤수(趙胤修, Cho, Younsoo)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 소장

일본 도호쿠대학(東北大學)에서 국제관계학박사(2008)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2016~2017)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에 근무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일본 정치외교,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며 한일 관계 및 한일 외교사에 대한 실증분석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연구하고 있다.

#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요구한 10년간의 법정투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의 허구

이양수 일한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차장

## 1. 한일 간의 가시, ‘청구권협정’

2018년 10월 28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하여 손해 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당시 수상 고 아베 신조(安倍晉三)는 곧바로 30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의연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sup>1</sup>라고 서슴지 않고 규탄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완전한 것’이나 ‘최종적인 것’이 하나라도 존재할까? 일본 정부는 후지산을 만들고 일본 열도도 만들고 지구까지도 창생시켜 우주까지 창조했다고 큰소리칠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억지 주장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sup>1</sup> 일본 수상관저([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810/30bura.html](http://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810/30bura.html)).

## 2. 과거의 조약에 들어있는 ‘영원한 것’들

그러나 과거에 맺은 국가 간의 조약들을 찾아 보면 ‘영원히’나 ‘영구히’라는 어구는 흔히 쓰이고 있다. 청일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해 1895년에 조인된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下關)조약에는 “청국은 대만이나 요동반도에 대한 주권과 영토를 영원히 일본국에 할여(割與)한다”는 말이 제2조에 있다. 러일전쟁 후 1905년 포츠머스조약에도 “러시아 제국 정부는 남사할린을 영원히 일본제국 정부에게 양여(讓與)한다”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910년 8월에 공포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제1조도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모두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라는 말부터 시작한다.

이 조약들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지금 대만이나 남사할린,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본인을 포함하여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위의 ‘영원한’ 조약들은 이제 모조리 무효일 텐데, 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만이 유효한지, 일본 정부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전혀 하지 않는다.

또 1965년에 체결된 것은 청구권협정 하나만

일본 정부의 홍보물인 『관보』(1965. 12. 18)는 하나의 조약, 4개의 협정과 하나의 교환 공문, 이렇게 6개를 ‘조약’으로 고시하였다.



없어진다. ‘무효’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무엇이 분쟁인지조차 알 수 없는 교환 공문

이 6개 속에 조약도 협정도 아닌 것이 하나 섞여 있어 눈에 띈다.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분쟁의 불씨인가. 주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분쟁인지 알 수 없다. 본문에 ‘독도’라는 단어는 물론, ‘다케시마(竹島)’라는 일본어도 없다.

그런데 1965년 6월 17일, 일본 측이 제시한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안)’에는 “다케시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한다”고 ‘다케시마’라는 어구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910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다케시마 문제) 248~249쪽에 의하면, 한국의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는 한국 정부의 안정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니 해결책이 없다면 한일회담을 중지해도 좋다”는 지시 아래 “우리가 귀국한 뒤에 독도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표명하더라도 당장은 반론하지 말아 달라. 우리의 목숨까지 걸려 있다”고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에게 탄원

일본에서 후일,  
국회에서 다케시마를  
포함한다는 답변까지  
삼가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은 없다.

仕方ない、日本側の最終案を呑むこととした  
 いが、一つお願いがあると前置きして、韓国  
 側代表団が韓国後本件了解には竹島が含ま  
 れてないとの趣旨を言明することがあつても日  
 本側からは公式には直ちに反論を行なわな  
 いで欲しい(われわれの命に係わる)、尤も、  
 日本で後日国会で竹島を含む旨の答弁を差控  
 えることまでお願いするつもりはないと述べ  
 た。これに対し、総理は了承する旨答えられ  
 た。」

かくて 竹島問題解決のための紛争の解  
 決に関する交換公文は日韓条約諸協定  
 調印式(午後5時開始)の25分前に確定  
 したのである。 6月17日~22日の紛争

한일회담 일본 측 문서 910,  
 248~249쪽

했다고 한다. 결국 교환 공문은 한일협정 조인식이 열리기 25분 전에 가  
 까스로 확정되었다.

**4. 합의 없이 체결된 기본조약**

당시 기본조약만 영문 작성을 하고, 다른 협정문은 일체 영문을 작성하  
 지 않는 것에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본조약만은 영  
 문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을 따르기”로 했다.



한일회담 일본 측 문서 910, 248쪽

‘병합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번역에 주문하지 않은 것”으로 약속한 것이다. 1952년 3월 12일 제1차 한일회담 제5회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오오노 가쓰미(大野勝巳) 참사관이 “(병합조약이) 무효가 된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 일한 양국이 각자 별도의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는데,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합의 없는 ‘국가 간의 약속’이니 국제법상 ‘조약’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지금 충돌하게 된 원인은, 모두 ‘기본조약’의 미합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5.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일본에서의 재판과 한일회담 한국 측 문서 공개재판

1965년에 한일회담이 타결되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처음 25년간의 양상은 일본 기업의 일방적 경제 진출이었다. 한국인이 자유롭게 해외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은 '88 서울올림픽이 열린 후인 1989년부터였다. 그때까지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 재판을 일으킬 기회도 없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주한 피폭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김학순 할머니도 원고로 참가한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은 1991년 12월 6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되었으나 2001년 3월 26일에 패소했고, 도쿄고등법원 항소심도 2003년 7월 22일에 기각되었으며, 2004년 11월 29일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 판결로써 원고 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판결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관여나 모집방법에 있어서 사기와 협박, 위안소에서 강간당한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시효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법정의 재판에서는 일본제철(日本製鐵), 일본강관(日本鋼管), 후지코시강재(不二越鋼材) 등 일부 기업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판결은 기각되거나 원고 측의 패소로 끝났다. 일본 법정에 실망한 원고들은 한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 한일회담의 한국 측 문

한국 측은 문서를 공개했는데, 일본 측은 전혀 공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 공개를 요구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2002년 10월 11일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sup>2</sup>

그 결과 법원은 2004년 2월 13일 “청구권협정 문서 공개를 명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 원고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중에 외무부가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항소를 철회했다. 같은 해 8월 14일 대통령 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회담 문서 공개의 검토를 지시했고, 2005년 1월 11일 문서 공개가 결정되었다. 외교부 문서 5건이 그달 17일에, 나머지 156건 약 3만 페이지가 그해 8월 26일에 공개되었다.

## 6. 일본 측 문서 공개 요구를 위한 시민단체 결성

한국 측이 먼저 문서를 공개했는데, 일본 측은 전혀 공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쌓여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모여 ‘일한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하 ‘요구하는 모임’)을 2005년 12월 18일 도쿄에서 결성하게 되었다.

한일회담의 일본 측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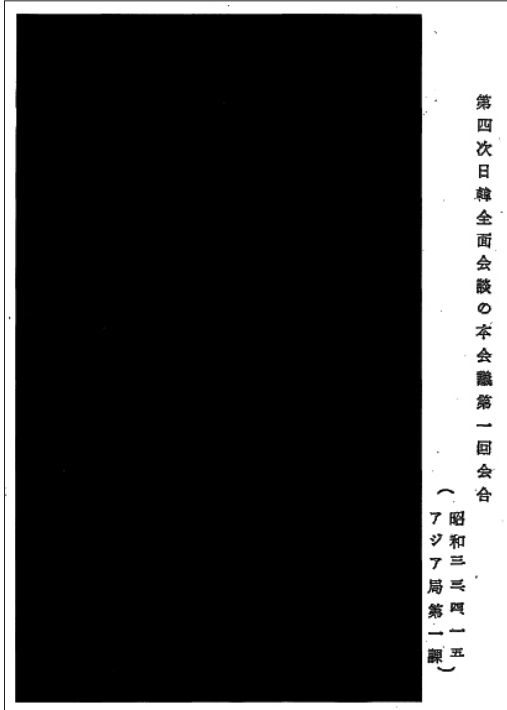
<sup>2</sup>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만, 외무성이 어떤 문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단서조차 없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한국 측 문서 목록을 참고로 제1차 회담부터 제7차 회담까지의 본회의, 기본관계 및 청구권위원회의 관련 리스트를 작성하여 2006년 4월 25일 외무성에 청구했다.<sup>3</sup>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청구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하며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길어지더라도 60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무성의 답변은 “공개할지의 여부는 2년 후에 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또한 2006년 8월 17일에 1차로 공개된 1958년 제4차 회담 본회의 회의록 14개 문서를 입수했지만, 내용을 모두 가려 참담했다. 게다가 4페이지 밑에는 “이하 15페이지는 공개하지 않음”이라고 도장 찍고 숨겨 버렸다. 이것을 보고 ‘공개되었다’고 인정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우리는 2006년 12월 18일, 숨겨진 부분의 공개와 미공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여 도쿄지방법원에 1차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해 12월 26일에 내려진 판결 내용은 “청구를 접수한 후 공개까지 2년이나 결정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결과이며 위법이다”라고 국가 측을 질책하는 것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일

**3** 일한회담 문서 공개 요구 리스트([www.f8.wx301.smilestart.ne.jp/nihonkokai/itiran/itiran.htm](http://www.f8.wx301.smilestart.ne.jp/nihonkokai/itiran/itiran.htm)).



제4차 일한전면회담 본회의  
제1회 회합 회의록(1958. 4. 15)

개 시민단체가 이기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주 극적인 승소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4월 시행된 ‘정보공개법’이 큰 힘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승소한 것은 ‘시간적인 문제’만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타국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외무성 측의 주장이 용인되어 버렸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외무성은 항소했으나, 2008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1,916개의 파일, 약 6만 페이지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가 공개된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어졌다. 원고 측의 제소 취하로 1차 소송은 끝났다. 그러나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548개의 파일에는 먹칠되거

나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개를 요구하며 2차, 3차 소송을 이어나갔다.

## 7. 참담했던 2차 소송 패소와 극적인 3차 소송의 역전 승소

28개 파일의 공개를 요구한 2차 소송은 2008년 4월 22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으나 2009년 12월 16일에 패소하였고, 항소심도 2010년 6월 23일 기각되어 최고재판소의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끝나버렸다. 인카메라(in camera)라는 먹칠된 부분을 판사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일본의 뒤떨어진 현황을 외면한 채 외무성 측 주장만 무조건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같은 문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다”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것이었다.

그러나 3차 소송에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대상 문서가 369개나 되어, 2008년 10월 14일의 제소로부터 판결이 나기까지 4년이나 걸렸다. 공판 중에 재판장이 “일본 측 문서를 외무성이 숨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공개된 문서를 일본 외무성이 숨기는 행위는 이해 못한다”고 아주 보편적인 발언을 하여 좋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었다.

드디어 2012년 10월 11일 먹칠된 부분의 약 70%를 공개할 것을 명한, 획기적인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2,606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판결문은 먹칠되어 숨긴 것의 합법성을 다루었던 결과물이었으며, 그 결론은 “382개 파일 중 268개를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용인된 118개 파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니 재검토를 진지하고 신속하게 전력투구할 것을 바란다”는 부언까지 있었다. 이 판결



3차 소송의 승소를 축하하는 원고와 회원들(2012. 10. 11)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일한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뉴스 33호



<한일 양국의 문서공개로 본 1965년 한일협정과 청구권문제> 주제의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는 필자(2009. 12. 4)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용인된 118개 파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니 재검토를  
진지하고 신속하게  
전력투구할 것을  
바란다”고  
부언하였다.

은 또 “인카메라가 없어서 재판관이 숨겨진 문서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현황”을 “일본의 법제도 미비”라고까지 신랄하게 비판했다.

외무성은 그달 24일(당시는 민주당 정권) 도쿄고등법원에 47건 문서의 ‘공개 결정’에 대해 ‘일부 항소’를 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항소심은 “이것이라면 절대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외무성이 엄밀히 선택한 문서만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모임’ 측에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예상대로 도쿄고등법원은 2014년 7월 25일, 47건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요구하는 모임’은 2차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데다, 변호단과 집행부도 “더 이상 최고 재판소까지 상고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필자를 포함하여 ‘상고해서 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으로 10년에 이르는 재판은 마무리되었고, ‘요구하는 모임’은 2016년 12월 23일 해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를 제공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sup>4</sup>를 개설하기로 하여 한일뿐만

4 일한회담 문서 정보공개 아카이브즈(<http://www.f8.wx301.smilestart.ne.jp/nikkankaidanbunso/>).

---

## 현지통신

아니라 전세계 연구자에게 제공 중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 것이다.



### 이양수(李洋秀, Yi, Yangsoo)

일한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차장

1972년 3월 도호(桐朋)학원대학 음악학부 졸업. 1983년 3월 지바현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창립. 1985년 2월 외국 인등록법의 지문 날인 거부. 1997년부터 KBS TV 일본 측 코디로 많은 방송 제작. 1998년 9월 북조선난민구원기금 창립. 2005년 12월 '일한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창립. 2009년 4·19문화상 시상.

## 워싱턴의 벚꽃과 저패뉴어리(Japanuary), 그리고 한일 관계

강병철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책 다음으로 읽는 책이 챕터북(chapterbook)이다. 챕터북에는 그림이 삽화 정도만 들어가고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챕터로 나뉘지는 게 특징이다. 이런 챕터북 가운데는 수십 년간 읽히는 책도 적지 않은데, 그 중 하나가 ‘플랫 스탠리(Flat Stanley)’ 시리즈다. 사고로 납작해진 주인공 스탠리의 모험을 다룬 이 시리즈의 세계여행 편 가운데 세 번째 책 주제가 일본이다. 수년 전 미국에서 아이와 함께 이 책을 봤을 때 일본을 소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워싱턴(Washington DC)에 있는 벚꽃이 거론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8세 안팎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책에서 미국과 일본의 깊은 유대관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어서다.

아이들 책에서까지 소개되는 워싱턴의 벚나무는 미일 관계의 뿌리로도 왕왕 표현된다. 백악관과 의사당 등으로 연결된 내셔널몰(National Mall)

근처에 있는 인공호수 타이들 베이슨(Tidal Basin)에서 매년 봄이면 만개하는 3천여 그루의 벚나무는 미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질감도 없이 수많은 인파가 벚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에서 미국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일본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2023년은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서 예년보다 벚꽃의 절정이 빨랐는데, 이는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밀월’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최근 미일의 밀월관계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저패뉴어리(Japanuary)’다. 지난 1월에 워싱턴의 외교가에서 회자됐던 이 말은 일본의 영문명 ‘Japan’과 영어의 1월 ‘January’를 합친 것으로, 워싱턴의 1월은 ‘일본의 달’이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은 일본이 2022년 12월 반격 능력 확보로 대표되는 새 방위정책을 발표하고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2+2회의(1월 11일)에 이어 정상회담(1월 13일) 등 대형 외교안보 이벤트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나왔다. 단순히 중요한 외교 일정이 1월에 집중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워싱턴 어디를 가든지 일본이 화제가 되는 분위기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분위기는 일본의 새 방위 정책에 대해 미국이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

백악관과 의사당  
등으로 연결된  
내셔널몰 근처에 있는  
인공호수 타이들  
베이슨에서 매년  
봄이면 만개하는  
3천여 그루의  
벚나무는 미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부장관 등이 각각 성명을 내고 “담대하고 역사적 조치”,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등의 찬사를 보냈다.

사실 전후 일본은 대(對)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전개했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서운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각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성을 기울여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가 북한·북핵 문제 등으로 주변 4국과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열도 전체가 미국의 ‘불침항모(不沈航母: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라고 천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국익이 미국과 비교적 잘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만 역내 안보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가해국이라는 한계로 그동안 미국의 적극적인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 이슈에서 재정적 부담만 지는 이른바 ‘미국의 현금자동인출기(ATM)’라는 말도 나왔다. 그런데 그동안 차근차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해온 일본이 정책 변화를 넘어서 국방비도 증액하고 반격 능력도 확보하겠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자 미국이 반색하면서 크게 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환영 수준은, 80살인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2023년 1월 13일 미일 정상회담 때 영상 8도의 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건물 밖에서 4분가량 기다리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직접 영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국빈 방문이 아니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았고 집무실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면서 매우 반

일본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환영 수준은, 80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월 13일 미일 정상 회담 때 영상 8도의 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건물 밖에서 4분가량 기다리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직접 영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졌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도 회담 이후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말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일본도 동참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으나, 결국 일본이 시차를 두고 조용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일 간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다.

사실 미일 양국을 이렇게 전례 없이 밀착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적인 안보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거칠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추구를 가속화하고 있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안보적이고 전략적인 위기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린치핀(linchpin: 수레바퀴 축에 끼는 핀, 즉 '핵심')으로 부르며 글로벌 전략동맹을 추구하는 등 관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양자 동맹관계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조태용 주미대사(2022)  
필자 촬영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2023. 2. 3)  
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2023. 2. 3)  
외교부 제공

발전은 거듭해온 것과 달리, 사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한일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부침을 거듭해 왔다. 과거 식민 지배의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한국 국민 일반의 정서로 볼 때 ‘일본’과 ‘안보 및 군사 협력’의 양립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다 일본이 수시로 이른바 과거사 도발을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한미일 3국 협력은 ‘아픈 손가락’이다. 사안 자체가 정서적으로 민감한데다 주권적 문제라서 대놓고 움직이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그나마 막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알려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소한의 한일 관계가 유지돼야 한미일 협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의 위상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는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똑같지는 않는다. 가령 일본이 새 방위정책을 발표했을 때 한국 내에서는 문서상의 독도 영유권 표현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워싱턴 조야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국의 정서와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조차 이런 반응

한국의 위상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는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똑같지는 않다.

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런 반응은 결국 국제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안보 새 판 짜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의 방위정책 전체가 아니라 일부 문구 등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밑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른바 피로감이 깔려 있다고 본다.

사실 피해자인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 결국 가해국인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조치하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억울한 면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 관계 진전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만 우선시할 경우 미국 등으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크게 경색되면서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사후 분석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에서는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외교열전’이라는 기획 기사 시리즈를 쓰면서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발표했을 때 아주국장을 지낸 유병우 전 대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이 고노담화를 내놓게 된 핵심 배경으로 유 전 대사는 한국의 ‘도덕적 우위’를 꼽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우리 정부 돈으로 피해자를 보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상 문제와 분리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취하자 일본이 움직였다는 것이 유 전 대사의 설명이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윤 대통령의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는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에 더해 미국 정부 인사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감동했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 인사들도 한국 내 정치적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결코 하기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3월 6일 한일 관계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미국은 ‘역사적인 발표’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조치에 비해서 일본의 호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석좌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과거에 대해 적절한 참회를 표시할 수 있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조치에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금부터의 대응이다. 일본에 ‘묻지마 면죄부’를 줬다는 야당의 지적에 공명하는 한국 국민이 적지 않은 현재 상황을 해소하려면, 일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윤 대통령의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는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에 더해 미국  
정부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감동  
했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의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직접 결단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일본의 독자 조치가 안 나올 경우 일본과의 대화에 더해 미국과의 진솔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외교가의 일반적 평가인데다가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이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 뒤 더 관계가 악화됐던 과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이미 국내정치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일본에 대해 ‘협력 파트너’라고 손을 내민 만큼 이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여론을 워싱턴 조야에 환기하는 외교적 노력은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등 양자 및 소다자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주도권은 향후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할 때 한국 국익을 우선해서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국민들이 즐기는 워싱턴의 벚꽃은 대한제국의 ‘망국’과 맞닿아 있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으로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식민 지배를 사실상 용인받은 일본이 강제병합(1910) 이후에 양국 간 우호의 상징으로 1912년 벚나무를

이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여론을 워싱턴 조야에 환기하는 외교적 노력은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등 양자 및 소다자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증한 것이 그 유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저패뉴어리시대’는 그때의 ‘벚꽃시대’와는 다르며, 또 달라야 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시작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정도로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만 1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은 세계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고 그에 맞춰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된다는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을 위로 두고 중국, 러시아에 인접한 한반도에서 장래의 통일 문제까지 시야에 넣으면서 국익을 실현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은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강병철(姜炳轍, Kang, Byeongcheol)**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2005년 연합뉴스에 입사해서 대부분을 정치부에서 보냈다. 국회에서 정당을 담당하다 외교부를 만 4년 동안 출입한 뒤 청와대를 취재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층적이며 복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경험을 쌓았다. 2018년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으며, 2022년 5월 다시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했다.

**Message from the Editor-in-Chief** Kim, Hyun-chul

## Guest Essays

### **Conflict Caused by the Historical Perceptions of Korea and Japan: Is There a Solution?**

Nam, Sang-gu

### **The Past and Future Outlook of Korea-Japan Relations**

Kazuhiko Togo

## Focus

###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Korea-Japan Cooperation**

### **Security in the Korea-Japan Relations: Is It Possible to Achieve Strategic Security Cooperation?**

Lee, Ki-tae

### **Economic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Current Status and Future Outlook**

PAK, Seongbin

### **Popular Perceptions of North Korea in Korea and Japan in Shown in “*Crash Landing on You*”**

Ha, Seunghee

### **Beyond Sentiments of “Anti-Japan” and “Hate Korea”**

Lee, Chiwon

###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LIM, Eunjung

## Research Trend

### **An Introduction to the Diplomatic Recordings on the Korea-Japan Treaty**

Cho, Younsoo

## Field Reports

### **The Activities and Current Status of Japanese Civic Groups that Request the Disclosure of Documents from the Korea-Japan Talks**

Yi, Yangsoo

### **Cherry Blossoms, January of Washington D.C. and ROK-Japan Relationship**

Kang, Byeongcheol